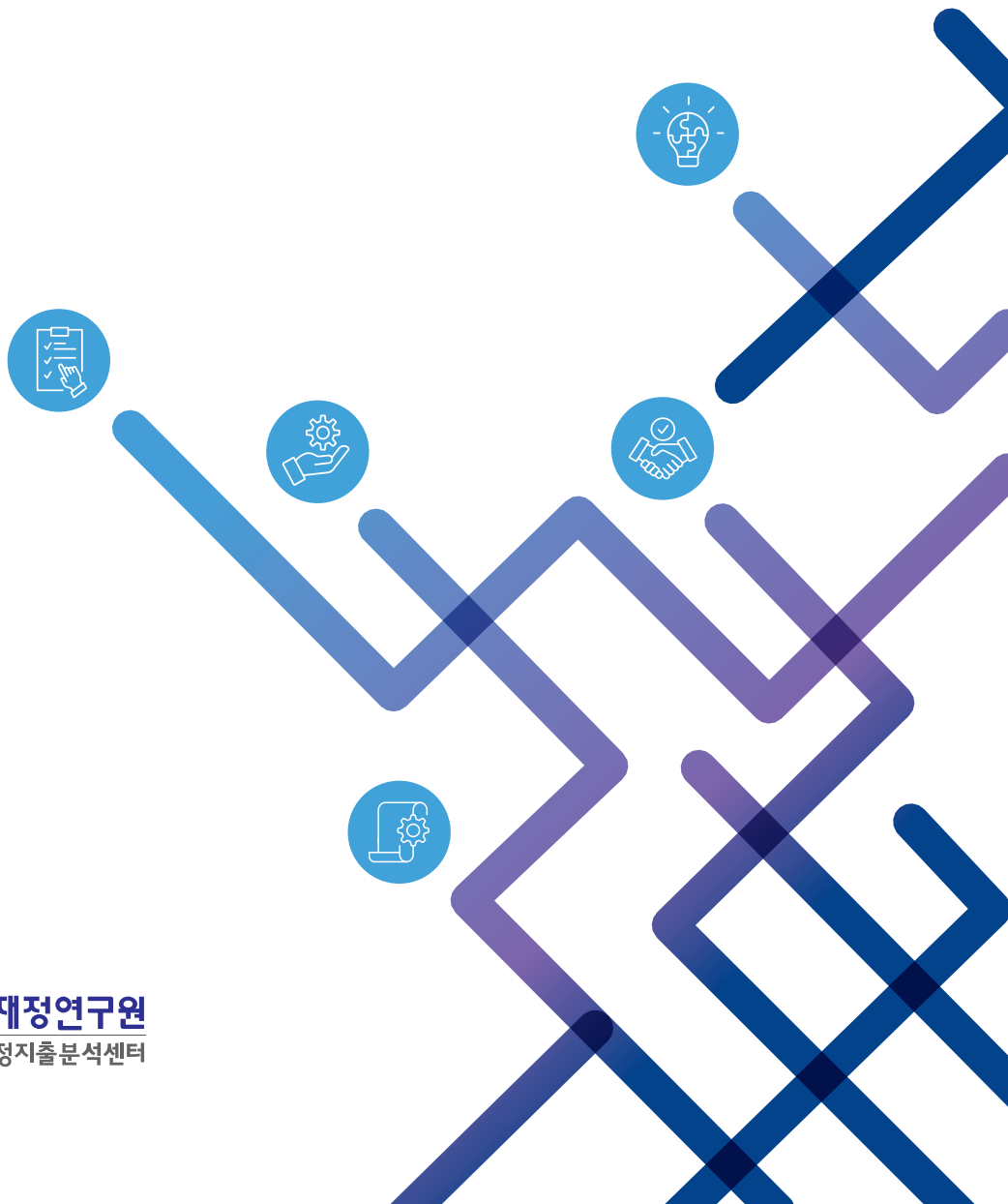


일본 국가채무 현황 및 시사점

2025. 12.



일본 국가채무 현황 및 시사점

2025. 12.

이은경 · 박창우

연구진

연구총괄

이은경 선임연구위원

연구자

박창우 선임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I. 서론	1
II. 일본의 경제 및 재정 현황	2
1. 일본의 경제 현황 및 전망	2
가. 주요 경제지표	2
나. 경제성장률 추이	4
다. 최근 성장률 전망	6
2. 일본의 재정 현황	7
가. 주요 재정지표 추이	7
나.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구성	9
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구성	10
III. 일본 국가채무 현황 및 특징	12
1. 일본 국가채무 변천사	12
2. 총채무 및 순채무	14
3. 일본 국가채무의 특징	17
IV. 일본 국가채무의 주요 원인 및 재정건전화 대응	26
1. 주요 원인	26
가. 고령화에 따른 세출 증가	26
나. 경기 악화 및 감세로 인한 세수 기반 약화	28

2. 재정건전화 대응 정책 현황	32
가. (2000년대) 세제·세출 일체 개혁과 사회보장·지방재정·공공부문 등 중심의 지출 효율화	32
나. (2010~2017년) 국채억제·PAYGO 기반의 세출·세입 일체 개혁과 소비세 등 증세를 통한 사회보장 재원 확보, 경제·재정재생계획(2015) 수립	34
다. (2018~2025년) 신경제·재정재생계획, 세출개혁·와이즈스펜딩을 축으로, 사회보장·지방지출 관리와 국채·세제개혁을 병행	36
3. 재정건전화 대응 정책 주요 성과	37
V. 일본 국가채무 관리의 주요 리스크 및 외부평가보고서	41
1. 주요 리스크	41
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가능성	41
나.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위험 및 사회보장지출 증가	43
다.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준칙 부재	46
2. 일본 채무 관련 국제기구 보고서	47
VI. 한국과 일본의 비교	54
1. 인구구조	54
2. 한국의 총수입·총지출·사회보험 재정추계 및 국채이자비용 비중	59
3. 고령화 관련 비용으로 인한 장기적 재정 압박 정도	63
4. 한국의 국채 보유자별 현황과 비교	64
5. 일반정부 총채무(GDP 대비)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추이 비교	68
VII. 결론 및 시사점	70
1. 결론	70
2. 시사점	71
참고문헌	73

표 목차

〈표 II-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3
〈표 II-2〉 2025회계연도 주요 재정지표(일반회계)	8
〈표 III-1〉 일반정부 총채무 국제비교(GDP 대비)	14
〈표 III-2〉 일반정부 순채무 국제비교(GDP 대비)	16
〈표 III-3〉 일본의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추이	18
〈표 IV-1〉 기본방침 2006에서 제시된 향후 5년간 세출개혁 개요	33
〈표 IV-2〉 일본의 주요 세목별 세수(국세)	40
〈표 VI-1〉 인구구조 및 부양비 추이	58
〈표 VI-2〉 사회보장재정의 GDP 대비 비중 추이(2024~2065년)	62
〈표 VI-3〉 국채 이자비용 및 총지출 대비 비중	62

그림 목차

[그림 II-1] GDP 성장률 추이	5
[그림 II-2]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구성	10
[그림 II-3]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구성	11
[그림 III-1] 채무잔고 추이(GDP 대비)	13
[그림 III-2] 일반정부 총채무 국제비교(GDP 대비)	15
[그림 III-3] 일반정부 순채무 국제비교(GDP 대비)	16
[그림 III-4]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추이	19
[그림 III-5] 사회보장관계비 세부항목 추이	20
[그림 III-6] 연금·의료 급여비 및 개호 급여비(사회보험) 세부항목 추이	21
[그림 III-7] 일본 국채 등 보유자별 잔고 내역(2024년 12월 기준)	23
[그림 III-8] 일본 국채 등 보유자별 구성비 내역(2024년 12월 기준)	24
[그림 III-9] 국가별 국채 등 보유자별 내역(2023년 12월 기준)	25
[그림 IV-1] 일본 보통국채 잔액의 세출 증가 요인	28
[그림 IV-2] 일반회계 세수의 세부항목 추이	30
[그림 IV-3] 일반회계 세출·세수 추이	31
[그림 V-1] 이자지출비용과 금리 추이	43
[그림 V-2] 고령화 추이와 향후 전망 추계	45
[그림 V-3] OPEN BUDGET SURVEY 2023의 재정 투명성 국제비교	53

[그림 VI-1] 한국·일본 고령화 비율 추이	55
[그림 VI-2] 한국·일본 유소년인구(0~14세) 추이	56
[그림 VI-3] 한국·일본 생산연령인구(15~64세) 추이	57
[그림 VI-4] 한국·일본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추이	58
[그림 VI-5] 총수입 전망(GDP 대비)	60
[그림 VI-6] 총지출 전망(GDP 대비)	60
[그림 VI-7] 사회보장재정의 GDP 대비 비중 추이(2024~2065년)	61
[그림 VI-8] 총지출 대비 국채 이자비용 추이(2020~2024년)	63
[그림 VI-9] 2060년까지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대응 기초재정수지 균형에 필요한 지출 삭감 또는 세입 증가 규모(GDP 대비)	64
[그림 VI-10] 한국 국채 보유자별 잔고 내역	66
[그림 VI-11] 한국 국채 보유자별 구성비 내역	66
[그림 VI-12] 한국 국채 보유자별 내역(2024년 기준)	67
[그림 VI-13] 한국·일본 국채 해외투자자 보유 비중 추이	68
[그림 VI-14] 한국 및 일본 일반정부 총채무(GDP 대비)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추이	69

I. 서론

- 일본은 세계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그 재정 상황은 국내외 경제 및 재정정책에 있어 중요한 비교 사례로 주목받음
 - 2025년도 일본 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정부 기준 국가 및 지방의 장기채무 잔고는 GDP 대비 211%에 달하며, IMF와 OECD가 제시한 국제통계에서도 G7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 비율을 지속적으로 기록
 - 일본의 채무누증 현상은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닌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지출,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 반복적인 경기부양 재정정책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
 - 특히 사회보장 관련 지출은 2025년 기준 일반 회계 총세출의 33.2%를 차지하며, 향후에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한국 역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복지지출 증가와 중장기 재정건전성 문제가 정책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고령화와 저출산 구조 속에서 정부의 재정운용이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정책적 대비가 가능한지를 분석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본 연구는 일본 국가채무 관리에 있어 구조적 위험요인과 제도적 대응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확대가 본격화되는 한국에 대해 시사점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일본의 2024년 금리상승기 진입과 및 최신 재정·경제 동향을 바탕으로, 일본의 국가채무 구조와 확대 경위, 최근의 재정운용 기초 및 국제비교 지표, 국제기구(IMF, OECD, AMRO 등)의 최신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II. 일본의 경제 및 재정 현황

1. 일본의 경제 현황 및 전망

- 일본은 2024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612조 7,000엔 규모(추정)이며, 세계 4위의 경제 대국¹⁾으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엔화는 미국달러, 유로에 이어 외환시장에서 세 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통화로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 받고 있음²⁾

가. 주요 경제지표³⁾

- 2024년 일본경제는 임금상승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1.3%)와 기업설비투자 증가(+3.0%)에도 불구하고 민간주택투자 감소(-0.3%)와 공적수요·외수 기여도 정체로 전반적 성장세가 제한될 전망
 - 민간최종소비지출은 물가 상승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이 확산·정착되는 가운데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할 전망
 - 민간주택투자는 종합경제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나,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는 가운데 전년 대비 약 0.3% 감소할 전망

1) Reuters, "Japan's GDP beats forecasts as consumption, business spending perk up," <https://www.reuters.com/world/japan/japans-economy-grows-faster-than-expected-q4-strong-capex-2025-02-17/>, 검색일자: 2025. 8. 4.

2)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OTC foreign exchange turnover in April 2022," https://www.bis.org/statistics/rpfx22_fx.htm, 검색일자: 2025. 8. 4.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주요국(일본) 2025회계연도 예산안』, 2025. 4.

- 민간기업설비투자는 기업 설비 투자 의욕 증가, 종합경제대책의 효과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할 전망
- 정부지출은 고령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나 종합경제대책에 따른 정부지출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물가 상승으로 실질 수치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낼 전망(실질GDP 성장률에 대한 공적수요 기여도는 약 0.0%p)
- 수출입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에 따라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나 국내 수요 증가에 기인한 수입 증가에 의해 보합세를 나타낼 전망(실질GDP 성장률에 대한 외수 기여도는 약 -0.0%p)

〈표 II-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전년 대비 %, %p, 조엔)

구분	2023	2024	2025	전년 대비 증가율					
	실적	추정	전망	2023		2024		2025	
	(명목)	(명목)	(명목)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국내총생산(조엔)	595.2	612.7	629.3	4.9	0.7	2.9	0.4	2.7	1.2
민간최종소비지출	323.1	333.0	343.6	2.4	-0.4	3.1	0.8	3.2	1.3
민간주택투자	22.2	22.6	22.8	0.9	0.8	1.5	-1.3	1.1	-0.3
민간기업설비투자	101.8	107.0	111.1	3.5	-0.1	5.1	2.3	3.8	3.0
민간재고변동(기여도) ¹⁾	0.6	0.7	0.5	(-0.4)	(-0.4)	(0.0)	(-0.0)	(-0.0)	(0.0)
재화·서비스 수출	132.2	140.0	146.5	7.1	2.8	5.9	1.7	4.7	3.6
(공제) 재화·서비스수입	137.7	148.0	154.5	-5.8	-3.3	7.4	4.3	4.4	3.6
내수기여도	/			1.9	-0.7	3.4	1.1	2.7	1.3
민간수요기여도				1.6	-0.6	2.6	0.8	2.4	1.3
공적수요기여도				0.3	-0.2	0.7	0.3	0.3	0.0
외수기여도				3.0	1.4	-0.4	-0.6	-0.0	-0.0

주: 1) () 안 수치는 GDP 성장 기여도를 의미
출처: 일본 내각부, 「令和7年度の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2025. 1. 24., p. 5, 표를 참고하여 작성

나. 경제성장률 추이⁴⁾⁵⁾

- 1960년대 일본은 본격적인 고도경제성장기로 1960년대 실질 GDP 성장률은 평균 10.5%로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이 시기에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루며 제조업 중심의 경제 기반을 확립
 - 이러한 성장의 원인으로는 수요 측면에서 설비투자 확대, 개인소비 증가, 수출 호조가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공급 측면에서는 인구 증가와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노동력 이동,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인적 자본의 질적 개선이 성장 잠재력을 대폭 높임
- 1970년대는 실질 GDP 성장률은 평균 5.2%로, 국제통화체제의 변화 및 오일쇼크로 인해 일본의 고속성장에서 둔화 국면에 접어들어 안정성장기로 전환됨
 - 1973년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은 환율 불안을 초래하였으며, 두 차례 오일쇼크(1973년, 1979년)로 인해 원유 가격 급등 및 경기침체가 발생
- 1980년 전반에 내수 부진이 지속되어 수출 의존형 성장 구조 강화로 인해 경상수지의 대규모 흑자가 발생하였고, 1985년 5월 체결된 플라자합의 여파로 일본 경제 단기경기가 후퇴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 진흥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가와 토지가격 등 자산가격이 급등으로 이어져 버블경제라 불렸으며, 이는 1991년 이후의 장기 경제침체의 요인이 됨
- 1990년대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과열로 인해 2~3차례 이자율 인상 정책을 실시하자 버블붕괴로 주가와 토지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실질 GDP 성장률은 평균 1.6%로 이전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하였으며, 1997~1998년 아시아 통화 위기

4) 일본 후생노동성, 「平成23年版·労働経済の分析—世代ごとにみた働き方と雇用管理の動向—」, <https://www.mhlw.go.jp/wp/hakusyo/roudou/11/dl/02-1.pdf>, 검색일자: 2025. 10. 22.

5) 일본 내각부, 「日本経済レポート (2024年度)」, https://www5.cao.go.jp/keizai3/2024/0212nk/n24_1_1.html, 2025. 2., 검색일자: 2025. 10.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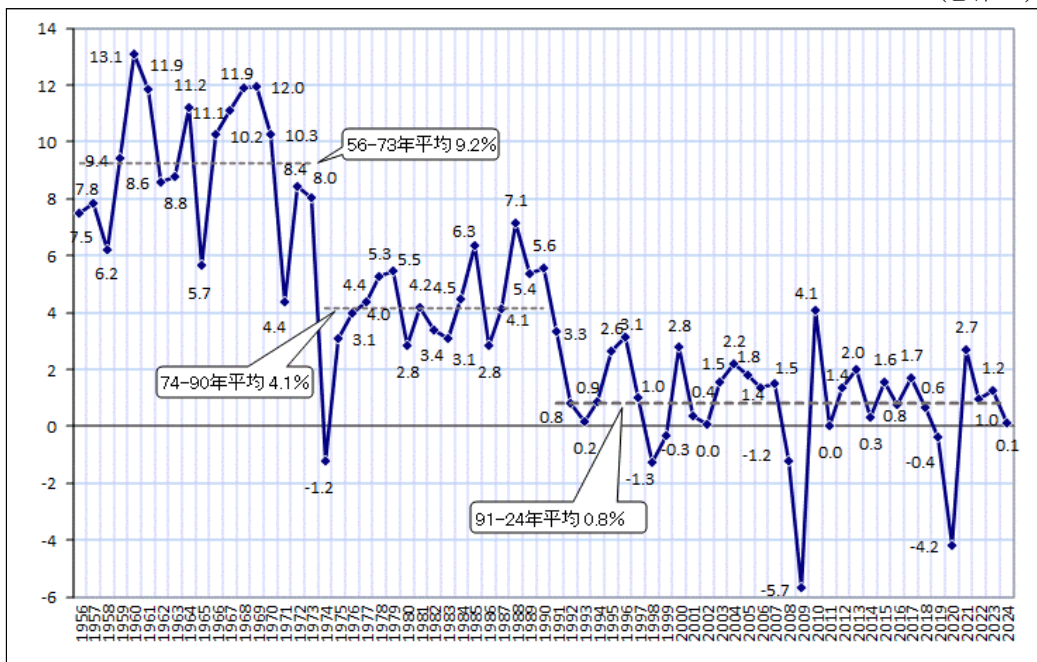
와 일본 금융 시스템 위기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발생

- 소비자물가지수는 1990년대 전반에는 평균 1.4%, 후반에는 0.3%였던 반면, 현금급여총액 상승률이 각각 1.9%, 0.1%로 나타나, 1990년대 후반에는 실질임금의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했음

- 2002년부터 일본 경제는 장기간의 경기확장 국면에 들어서 2004년 실질 GDP 성장률이 2.2%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8년 리먼 쇼크로 인해 경제상황이 급속히 악화되어 2009년 실질 GDP 성장률이 -5.7%를 기록함

[그림 II-1]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주: 1. 연평균은 각 연도의 수치값의 단순 평균. 1980년도 이전은 『헤이세이 12년판 국민경제계산 연보』(68SNA 기준), 1981~1994년도는 연보(『헤이세이 21년도 확정, 93SNA』)에 의함. 그 이후는 2008SNA로 이행. 2025년 4~6월기 1차 속보치는 《2025년 8월 15일 공표》

원출처: 일본 내각부, 「国民経済計算 (GDP統計)」, <https://www.esri.cao.go.jp/jp/sna/menu.html>, 검색일자: 2025. 10. 10.

출처: 社会実情データ図録サイト, 「経済成長率の推移」, <https://honkawa2.sakura.ne.jp/>, 검색일자: 2025. 10. 10.

- 2013년 이후 아베노믹스 시행으로 대규모 양적 완화, 재정지출 확대 등이 추진되었으나, 2014년 4월 사회보장의 충실화, 안정화를 위해 17년만에 소비세율이 5%에서 8%로 인상된 영향으로 GDP 성장률이 감소
-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GDP 성장률이 -4.3%로 2009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한 후 2021~2023년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GDP 성장률 평균이 1% 내외

다. 최근 성장률 전망

- 해외 각국의 통상 정책 영향 등에 기인하여 기업 수익이 악화되고 해외 경제가 둔화되면서 완화적인 금융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장속도가 둔화될 전망이며, 이후 해외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로 이어져 성장률이 다시 상승할 전망
 - 실질 GDP 성장률은 2025회계연도에는 0.6%, 2026~2027회계연도에는 각 0.7%, 1.0%를 나타낼 전망
 - 잠재성장률은 디지털화 및 인적 자본 투자 진전에 의한 생산성 상승, 설비 투자 증가에 따른 자본 스톡의 증가율 확대 등을 배경으로 완만하게 상승할 전망

2. 일본의 재정 현황

가. 주요 재정지표 추이

- 일본은 2025회계연도 기준 기초재정수지가 -0.8조엔까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GDP 대비 211%에 달하는 국가채무와 25% 수준의 국채의존도를 유지하며 구조적 재정 부담이 지속
 - 일본 정부의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약 115.5조엔으로 전체 GDP 대비 18.4%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이자비용, 채무상환비를 제외한 실질적인 정부지출 부담을 나타내는 기초재정수지 대상 경비는 87.7조엔으로 GDP 대비 13.9% 수준
 - 기초재정수지는 2021회계연도에 정점(-20.4조엔)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회계연도에 -0.8조엔으로,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재정적자 기조에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냄
 - 2025회계연도 국채잔고는 약 1128.5조엔(GDP 대비 179.3%)에 달하며, 국가 및 지방의 장기채무잔고는 1330.1조엔(GDP 대비 211%)으로 국가채무 규모 및 GDP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 국채의존도는 2021회계연도 40.9%에서 2025회계연도 24.8%로 하락하였으나, 전체 세출의 약 25%를 국채발행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표 II-2〉 2025회계연도 주요 재정지표(일반회계)

(단위: 조엔, %)

구분	2019 회계연도 ⁸⁾	2020 회계연도 ⁸⁾	2021 회계연도	2022 회계연도	2023 회계연도	2024 회계연도	2025 회계연도 (정부안)
일반회계 세출¹⁾							
일반세출 ²⁾	62.0	63.5	66.9	67.4	72.7	67.8	68.2
기초재정수지 대상 경비 ³⁾	78.3	79.7	83.4	83.7	89.5	85.9	87.7
GDP 대비 % ⁴⁾	14.1	14.8	15.0	14.8	15.0	14.0	13.9
일반회계 세출총액	101.5	102.7	106.6	107.6	114.4	112.6	115.5
GDP 대비 %	18.2	19.1	19.2	19.0	19.2	18.4	18.4
일반회계 세입¹⁾							
조세	62.5	63.5	57.4	65.2	69.4	69.6	78.4
GDP 대비 %	11.2	11.8	10.4	11.5	11.7	11.4	12.5
기타수입	6.30	6.59	5.56	5.44	9.32	7.51	8.45
조세 + 기타수입	68.8	70.1	63.0	70.7	78.8	77.1	86.9
GDP 대비 %	12.4	13.0	11.4	12.5	13.2	12.6	13.8
국채발행 수입	32.7	32.6	43.6	36.9	35.6	35.4	28.6
세입총액	101.5	102.7	106.6	107.6	114.4	112.6	115.5
국채잔고⁵⁾							
GDP 대비 %	886.7	946.6	991.4	1,027.1	1,053.7	1,104.0	1,128.5
GDP 대비 %	159.2	175.7	178.8	181.1	177.0	180.2	179.3
국가 및 지방 장기채무잔고 ⁵⁾	1,105.8	1,165.0	1,208.1	1,239.5	1,262.3	1,310.9	1,330.1
GDP 대비 %	199	216	218	219	212	214	211
기초재정수지 ⁶⁾	-9.5	-9.6	-20.4	-13.0	-10.8	-8.8	-0.8
국채의존도(% ⁷⁾	32.2	31.7	40.9	34.3	31.1	31.5	24.8

주: 1. 재정지표 통계는 중앙정부 단위

1)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은 당초예산 기준.

2) 일반세출은 '일반회계 세출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3) 기초재정수지 대상 경비는 '일반회계 세출총액'에서 이자지급비와 채무상환비를 제외한 것을 의미

4) GDP는 2023회계연도까지는 실적치, 2024~2025회계연도는 정부 전망치를 사용

5) 국채잔고는 2023회계연도까지는 실적치, 2024회계연도는 추경 후 예산, 2025회계연도는 정부안에 근거한 전망치, 지방은 지방채계획 등에 근거한 전망치.

6)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조세+기타수입-기초재정수지 대상 경비

7) 국채의존도=국채발행액/일반회계세출총액

8) 2019~2020회계연도의 수치는 임시·특별조치 관련 수치를 포함

출처: 일본 재무성, 「我が国の財政事情(令和7年度予算政府案)」, 2024. 12. 27., p. 6; pp. 9~10.을 참고하여 작성

나.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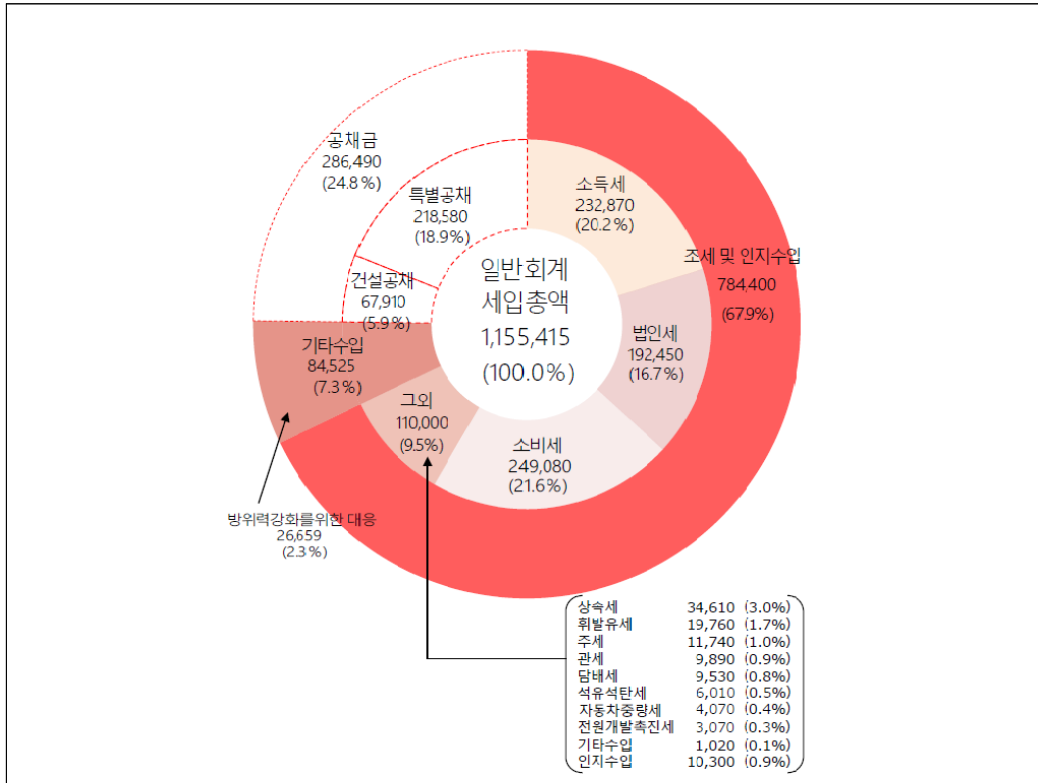
- 일본 2025회계연도 세입의 약 67.9%는 조세 및 인지수입이며, 그 외에는 특별공채, 건설공채로 이루어진 공채금(약 24.8%)에 의존
 - 조세 및 인지수입은 총 78조 4,000억엔으로, 소비세(24조 9,080억엔), 소득세(약 23조 2,870억엔), 법인세(19조 2,450억엔)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비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건설공채⁶⁾는 6조 7,910억엔으로 전체의 5.9% 수준이며, 공공사업비, 출자금, 대출금 등 특정 목적에 사용됨
 - 특별공채⁷⁾는 21조 8,580억엔으로 전체의 18.9% 수준이며, 공공사업비 등 이외의 세출에 충당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
 - 그 외에 상속세, 휘발유세, 주세, 관세 등이 전체의 약 9.5%를 차지

6) 「재정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채·차입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공사업비·출자금·대부금 재원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채 발행을 허용하는데, 이러한 단서 규정에 따라 발행되는 것이 건설국채이며, 건설국채에 의한 수입이 건설공채임(출처: 일본 재무성, 『債務管理リポート2025』, 2025.)

7) 건설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여전히 세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부는 공공사업비 등 이외의 세출에 충당할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공채 발행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국채가 「특별국채」 또는 「적자국채」이며, 이러한 국채에 의한 수입이 특별공채임(출처: 일본 재무성, 『債務管理リポート2025』, 2025.)

[그림 II-2]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구성

(단위: 억엔, %)



출처: 일본 재무성, 『令和7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4. 12. 27., p.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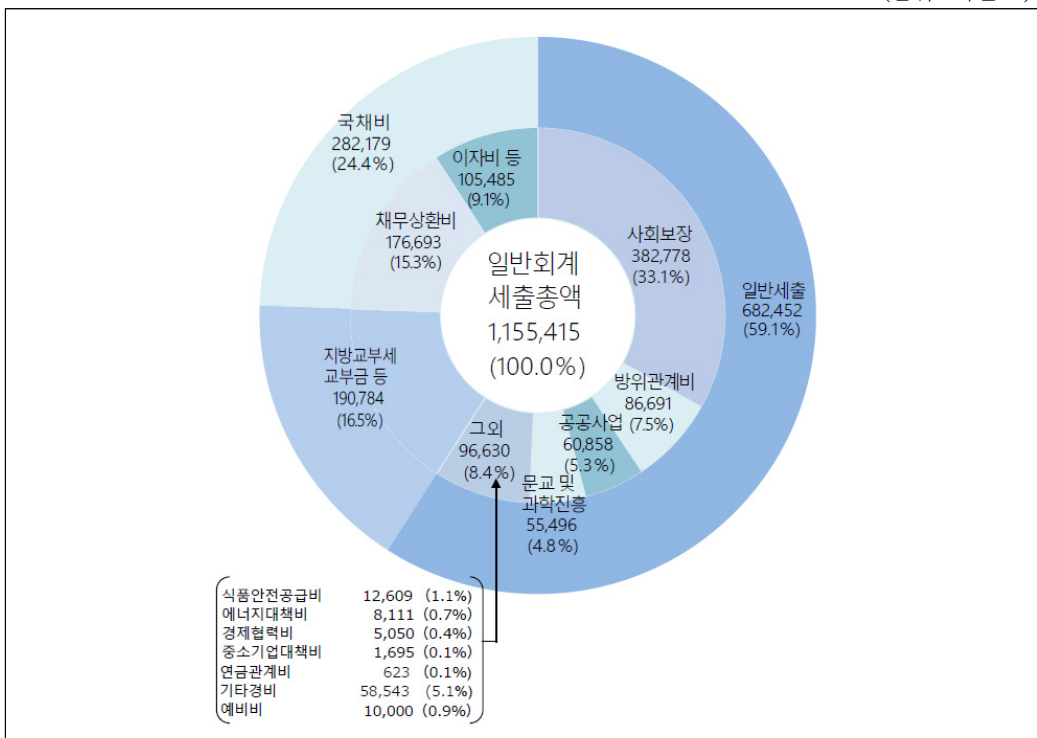
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구성

- 일본 2025회계연도 세출의 약 74%가 사회보장관계비, 국채비, 지방교부세·교부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에 방위관계비(약 7.5%), 문교 및 과학진흥비(약 4.8%), 공공사업관계비(약 5.3%) 등 기타 정책성 지출 예산항목이 차지

- 사회보장관계비는 연금보험, 개호보험, 의료급여⁸⁾ 등 사회복지에 필요한 비용이며, 2025회계연도에는 38조 2,778억엔으로 전체 세출의 약 33%를 차지
- 국채비는 이자 및 원금상환비용이며, 2025회계연도에는 28조 2,179억엔으로 전체 세출의 24.4%를 차지하고 있어 세입의 상당 부분이 채무 유지에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
- 지방교부세·교부금은 2025회계연도 기준 19조 784억엔으로 전체 세출의 16.5%를 차지하며, 중앙정부 재정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사용되고 있음

[그림 II-3]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구성

(단위: 억엔 %)



출처: 일본 재무성, 『令和7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4. 12. 27., p. 13.

8) 여기서 의료급여는 일본의 건강의료보험 급여를 의미함

Ⅲ. 일본 국가채무 현황 및 특징

1. 일본 국가채무 변천사

- 일본의 국가채무는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전쟁, 고도성장, 석유위기, 버블경제,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변화해 왔음
 - 제2차 세계대전 후 고도성장과 함께 채무가 안정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 외생적 충격과 경기 부양 목적의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가 반복되면서 채무 비율이 상승하기 시작
 - 1990년대 버블붕괴 이후 경제성장률이 1975~1991년 평균 4%에서 1992~2004년까지 평균 1%까지 하락하는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⁹⁾와 감세 실행 등으로 인해 세수 감소로 이어졌으나, 반복적인 경기대책 비용,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장 관련 지출 증가로 재정수지가 악화¹⁰⁾
 - 2011년 동일본대지진 경우에는 인프라 복구, 피해지역 지원, 원자력 사고 대응 등 경기와 민생 안정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채 발행 규모가 제2차 세계대전 수준까지 크게 확대됨
 -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더믹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지급, 고용조정조성금, 의료대응 강화, 기업자금지원 등 다양한 정책으로 인해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¹¹⁾¹²⁾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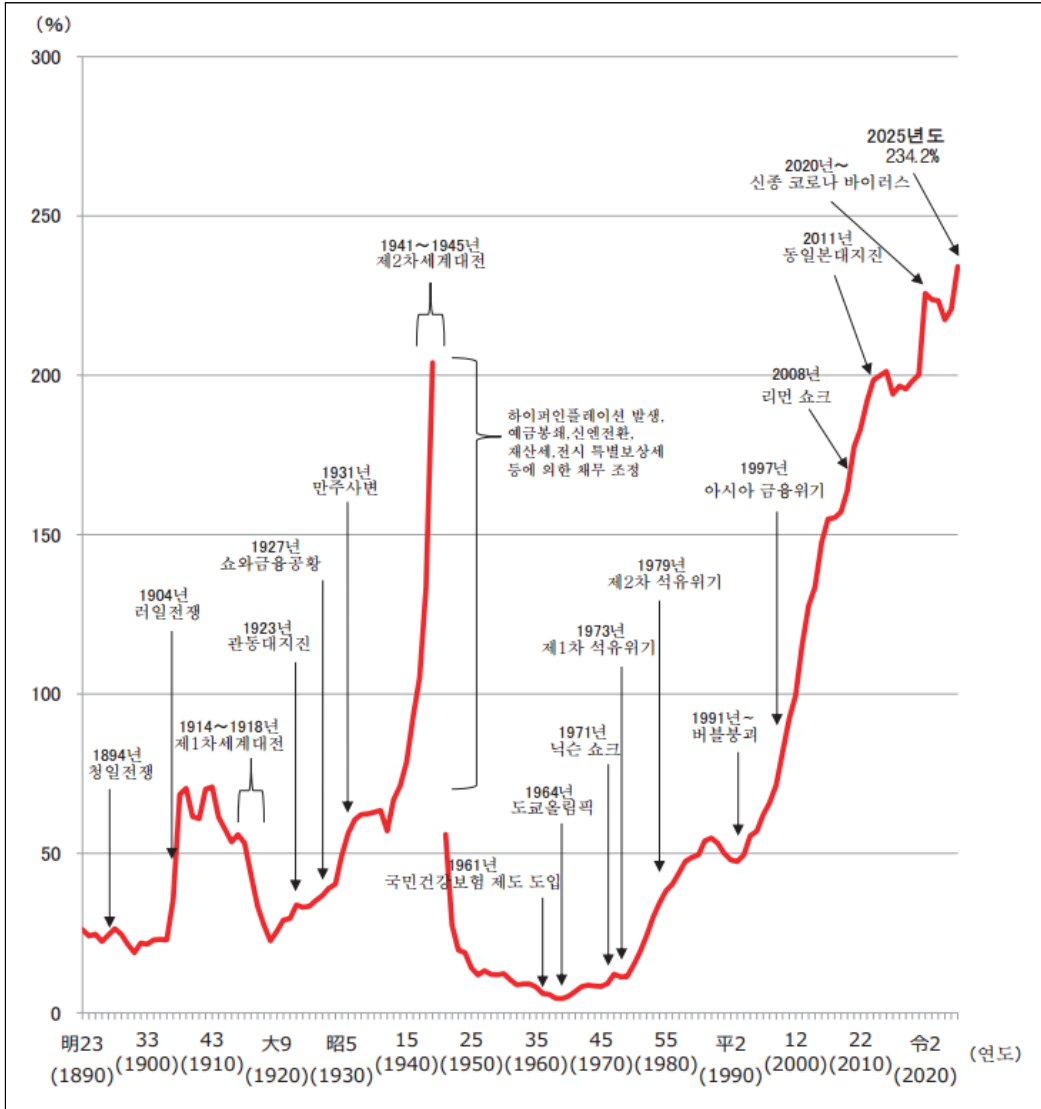
9) R. Glenn Hubbard and Takatoshi Ito, "1 Overview of the Japanese Deficit Question," https://www.elibrary.imf.org/display/book/9780230007871/ch001.xml?utm_source=chatgpt.com#ch01ref02, 검색일자: 2025. 6. 2.

10) 일본 내각부, 「平成13年度 年次經濟財政報告」, https://www5.cao.go.jp/j-j/wp/wp-je01/wp-je01-00301.html#sb3_1, 검색일자: 2025. 6. 3.

11) 일본 내각부, 「經濟対策等」, <https://www5.cao.go.jp/keizai1/keizaitaisaku/keizaitaisaku.html>, 검색일자: 2025. 6. 3.

[그림 III-1] 채무잔고 추이(GDP 대비)

(단위: %)



12) 일본 수상관저,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 (第27回)」, https://www.kantei.go.jp/jp/98_abe/actions/202004/07corona.html, 검색일자: 2025. 6. 3.

13) 일본 수상관저, 「經濟財政諮問會議」, https://www.kantei.go.jp/jp/98_abe/actions/202004/07keizaishimon.html, 검색일자: 2025. 6. 3.

- 주: 1. 정부 채무 잔액은 '국채 및 차입금 현재고'의 연도 말 수치('국채통계연보' 등 기준)이며, 2023회계연도까지는 실적치, 2024회계연도는 수정 후 예산, 2025회계연도는 예산(수정 후)에 따른 수치
2. 정부 단기 증권 중 재정용자자금증권, 외환자금증권, 식량증권(식량 및 농산물 등의 매입대금의 지급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발행)의 잔액이 발행 한도액(총 210조 엔)에 도달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1945회계연도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시점으로 인해 GNP 데이터가 없어 산출이 불가능
3. GDP는 1929회계연도까지는 「오오카와 · 다카마츠 · 야마모토 추계(大川 · 高松 · 山本推計)」의 실질 국민지출
4. 1930회계연도부터 1954회계연도까지는 명목 GNP, 1955회계연도 이후는 명목 GDP 수치
5. 1954회계연도까지는 「일본 장기 통계 총람(日本長期統計総覽)」, 1955회계연도 이후는 국민경제계정에 따름 (1955회계연도부터 1979회계연도까지는 68SNA 기준, 1980회계연도부터 1993회계연도까지는 93SNA 기준, 1994회계연도 이후는 08SNA 기준). 단, 2024회계연도 및 2025회계연도는 「2025년도 경제 전망 및 경제재정운영 기본 방침(2025년 1월 24일 각의 결정)」에 따른 수치임
- 출처: 일본 재무성, 『日本の財政関係資料』, 2025. 4., p. 56.

2. 총채무 및 순채무

- 일본의 일반정부 총채무와 순채무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팬데믹 이후 잠시 상승 속도가 완화되었으나 2025회계연도 기준 모든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
- 2025회계연도 기준 일본의 일반정부 총채무는 GDP 대비 248.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과거 재정위기 대표 사례인 그리스(152.9%)보다 약 100%p 높은 수준
 - 일반정부 순채무¹⁴⁾ 역시 GDP 대비 153.9%로 총채무와 마찬가지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한국보다 약 130%p 높은 수준

〈표 III-1〉 일반정부 총채무 국제비교(GDP 대비)

(단위: %)

국가	2001	2005	2010	2015	2020	2025
호주	17.1	10.9	20.3	37.7	57.0	49.6
캐나다	81.5	70.6	84.0	92.0	118.2	103.2
프랑스	58.7	67.5	85.2	95.5	114.6	115.3

14) 순채무는 총채무에서 정부가 보유한 금융자산(국민의 보험료로 이루어진 연금 적립금 등)을 차감한 것을 의미

〈표 III-1〉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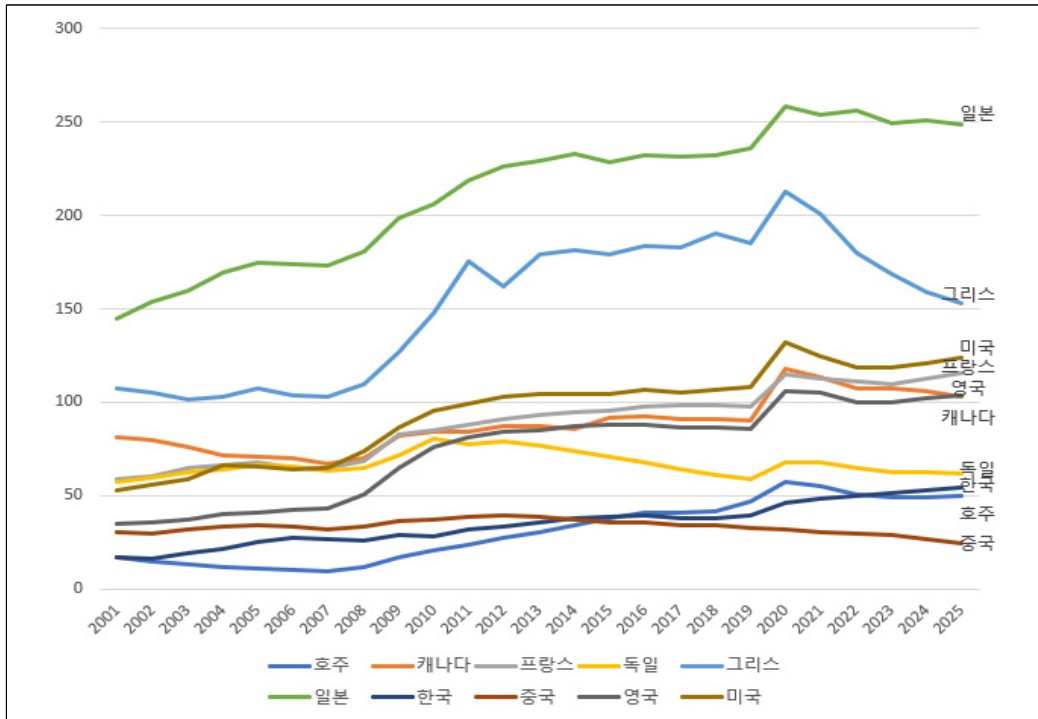
(단위: %)

국가	2001	2005	2010	2015	2020	2025
독일	57.6	66.5	80.4	70.6	67.9	62.1
그리스	107.1	107.4	147.5	179.0	213.2	152.9
일본	145.1	174.6	205.9	228.3	258.4	248.7
한국	16.6	24.9	28.3	38.8	45.9	54.3
중국	30.1	34.1	36.9	35.9	32.1	24.2
영국	35.0	41	75.9	87.9	105.8	103.8
미국	53.1	65.5	95.2	104.7	131.8	124.1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4,"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4/october>을 바탕으로 재작성, 검색일자: 2025. 5. 20.

[그림 III-2] 일반정부 총채무 국제비교(GDP 대비)

(단위: %)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4,"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4/october>을 바탕으로 재작성, 검색일자: 2025. 5. 20.

〈표 III-2〉 일반정부 순채무 국제비교(GDP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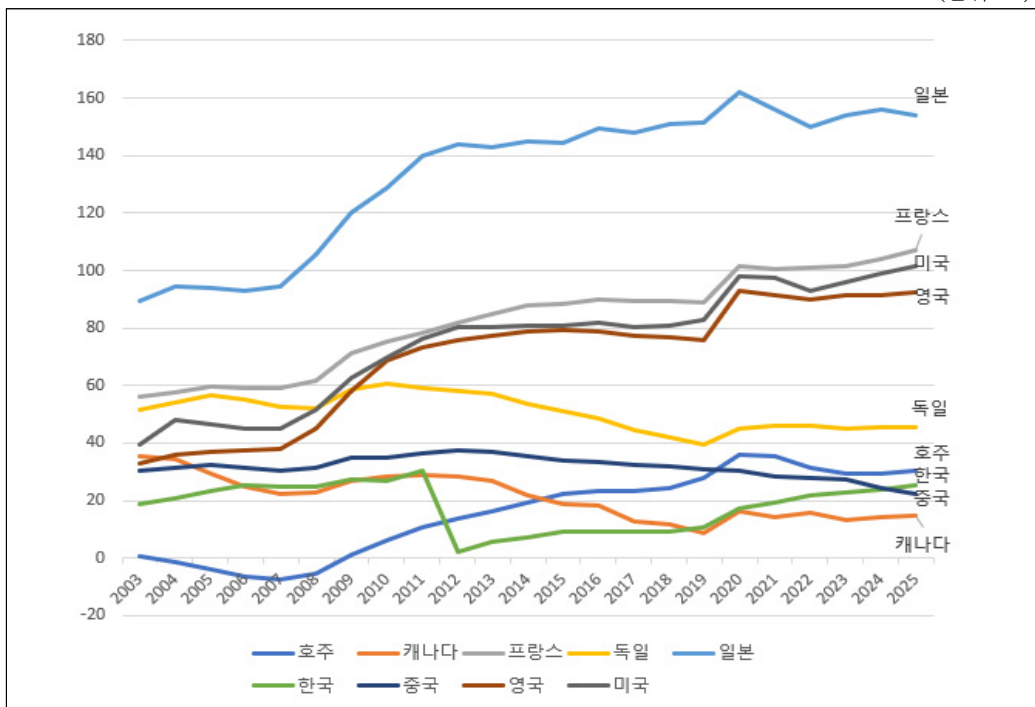
(단위: %)

국가	2003	2005	2010	2015	2020	2025
캐나다	35.43	29.32	28.23	18.54	16.10	14.59
프랑스	56.14	59.83	75.35	88.63	101.62	107.09
독일	51.71	56.53	60.73	51.17	45.08	45.66
일본	89.53	94.06	128.90	144.45	162.03	153.93
한국	18.93	23.56	26.80	9.04	17.02	25.39
중국	30.27	32.19	35.01	34.06	30.25	22.32
영국	32.96	37.08	68.77	79.35	93.12	92.41
미국	39.44	46.66	69.84	80.86	97.76	101.69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4,"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4/october>을 바탕으로 재작성, 검색일자: 2025. 5. 20.

[그림 III-3] 일반정부 순채무 국제비교(GDP 대비)

(단위: %)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4,"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4/october>을 바탕으로 재작성, 검색일자: 2025. 5. 20.

3. 일본 국가채무의 특징

- 일본의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구조를 보면, 일본 국가채무 증가는 크게 사회보장관계비, 국채비, 지방교부세·교부금의 지출 증가가 주요 원인 중 하나임¹⁵⁾
 - (사회보장관계비) 2001년 19조 2,914억엔에서 2025년 38조 2,778억엔으로 약 2배 증가하였으며, 세출합계 대비 비중은 22.93%에서 33.13%로 약 10%p 증가로 고령화의 진행 등에 수반하는 금액, 비중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국채비) 2001년 15조 8,289억엔에서 2025년 28조 2,179억엔으로 약 12.4조 엔이 증가하였으며, 세출합계 대비 비중은 18.81%에서 24.42%로 약 5.8%p 증가로 금액, 비중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지방교부세·교부금) 세출합계 대비 비중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금액은 약 2.3조엔 증가
 - (방위관계비) 2023년 방위력 정비계획¹⁶⁾을 수립함에 따라 2022년 5조 5,286억 엔에서 2023년 12조 195억엔으로 대규모 증액을 하였으며, 2001년 세출액과 비교하면 약 3.7조엔 증가로 2025년 현재는 8조 6,691억엔 수준을 유지

15) 일본 재무성, 「日本の財政関係資料」, 2025. 4., https://www.mof.go.jp/policy/budget/fiscal_condition/related_data/202504_00.pdf, 검색일자: 2025. 9. 25.

16) 방위력 정비계획은 ‘국가방위전략’에 따라,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을 포함한 능력의 유기적으로 통합된 시너지 효과를 통해 ‘다영역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평시부터 무력 충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상대방의 능력과 새로운 형태의 전쟁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유연하고 전략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출처: 일본 방위성, “Defense Programs and Budget of Japan,” 2023. 3. 30., https://www.mof.go.jp/en/d_act/d_budget/pdf/230330a.pdf, 검색일자: 2025. 9. 25.

〈표 III-3〉 일본의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추이

(단위: 억엔, %)

구분	2001	2004	2007	2010	2013	2016	2019	2022	2025
사회보장관계비	192,914 (22.93)	202,860 (24.29)	211,410 (25.84)	282,489 (29.86)	292,320 (29.18)	322,082 (33.02)	335,007 (33.05)	438,680 (33.14)	382,778 (33.13)
문교 및 과학진흥비	66,770 (7.93)	61,490 (7.36)	54,577 (6.67)	60,514 (6.40)	61,614 (6.15)	55,983 (5.74)	59,105 (5.83)	86,692 (6.55)	55,496 (4.80)
연금관계비	13,500 (1.60)	11,360 (1.36)	9,407 (1.15)	7,093 (0.75)	5,043 (0.50)	3,349 (0.34)	2,022 (0.20)	1,127 (0.09)	623 (0.05)
방위관계비	49,688 (5.90)	48,981 (5.86)	47,576 (5.81)	46,696 (4.94)	47,923 (4.78)	51,500 (5.28)	56,266 (5.55)	55,286 (4.18)	86,691 (7.50)
공공사업관계비 (재해 복구 등 사업비)	108,201 (12.86)	82,357 (9.86)	72,571 (8.87)	58,027 (1.088)	79,752 (4.468)	67,097 (2.383)	76,096 (5.210)	81,264 (4,600)	60,858 (5.27)
경제협력비	9,608 (1.14)	8,800 (1.05)	7,874 (0.96)	7,458 (0.79)	6,510 (0.65)	7,433 (0.76)	6,533 (0.64)	8,996 (0.68)	5,050 (0.44)
중소기업대책비	4,248 (0.50)	2,883 (0.35)	4,178 (0.51)	8,301 (0.88)	5,041 (0.50)	4,299 (0.44)	7,792 (0.77)	33,960 (2.57)	1,695 (0.15)
에너지대책비	6,324 (0.75)	5,041 (0.60)	8,657 (1.06)	8,453 (0.89)	9,626 (0.96)	9,727 (1.00)	10,486 (1.03)	20,015 (1.51)	8,111 (0.70)
식품안정공급 관계비	7,376 (0.88)	6,520 (0.78)	6,743 (0.82)	11,218 (1.19)	11,719 (1.17)	11,404 (1.17)	11,213 (1.11)	19,470 (1.47)	12,609 (1.09)
기타경비	57,494 (6.83)	53,118 (6.36)	53,010 (6.48)	72,349 (7.65)	93,872 (9.37)	68,298 (7.00)	65,962 (6.51)	164,535 (12.43)	58,543 (5.07)
코로나19 관련 대책 예비비				-	-	-	-	-	-
/원유가격·물가 상승 대책 및 임금 인상 촉진 환경 정비 대응 예비비				-	-	-	-	-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경제비상대응 예비비				-	-	-	-	-	-
예비비				-	-	-	-	-	10,000 (0.87)

〈표 III-3〉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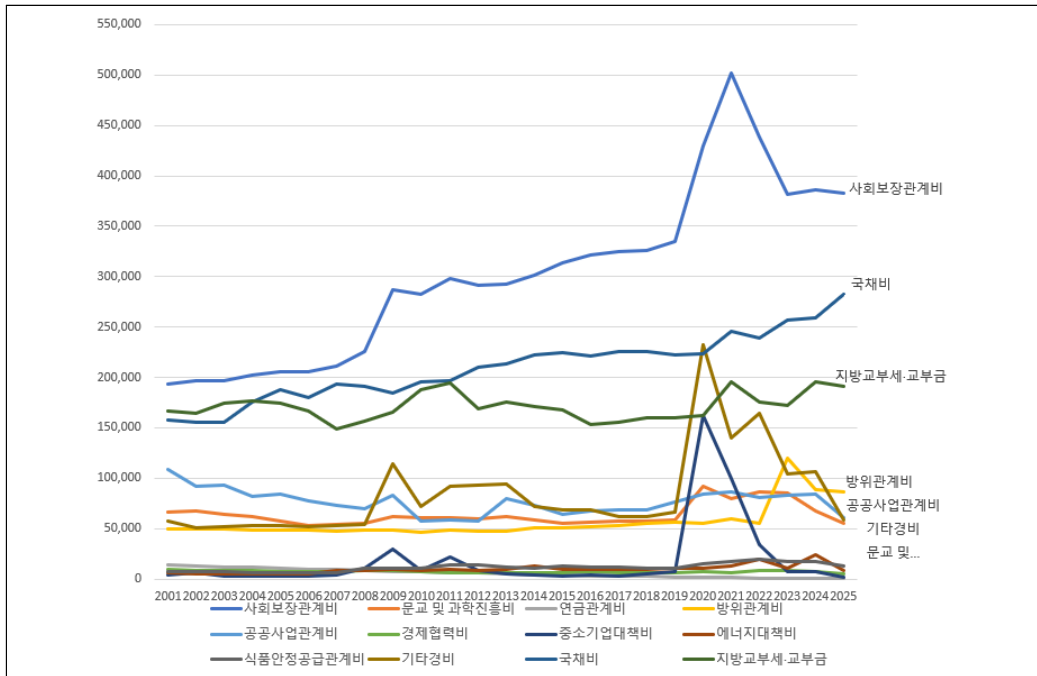
(단위: 억엔, %)

구분	2001	2004	2007	2010	2013	2016	2019	2022	2025
국채비	158,289 (18.81)	175,149 (20.97)	192,904 (23.58)	195,440 (20.66)	212,935 (21.25)	220,856 (22.64)	222,857 (21.99)	238,697 (18.03)	282,179 (24.42)
지방교부세·교부금	167,056 (19.85)	176,621 (21.15)	149,316 (18.25)	187,903 (19.86)	175,535 (17.52)	153,393 (15.73)	160,324 (15.82)	175,134 (13.23)	190,784 (16.51)
합계	841,468 (100)	835,180 (100)	818,223 (100)	945,941 (100)	1,001,889 (100)	975,418 (100)	1,013,665 (100)	1,323,855 (100)	1,155,415 (100)

주: 1. 2023년도까지는 결산, 2024년도는 추경 후 예산, 2025년도는 정부예산안을 반영
 2. () 안의 수치는 비중을 의미
 3. 2007년 산업투자특별회계로 이입 제외
 출처: 일본 재무성, 「財政統計(予算決算等データ)」, <https://www.mof.go.jp/policy/budget/reference/statistics/data.htm>, 검색일자: 2025. 6. 4.

[그림 III-4]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추이

(단위: 억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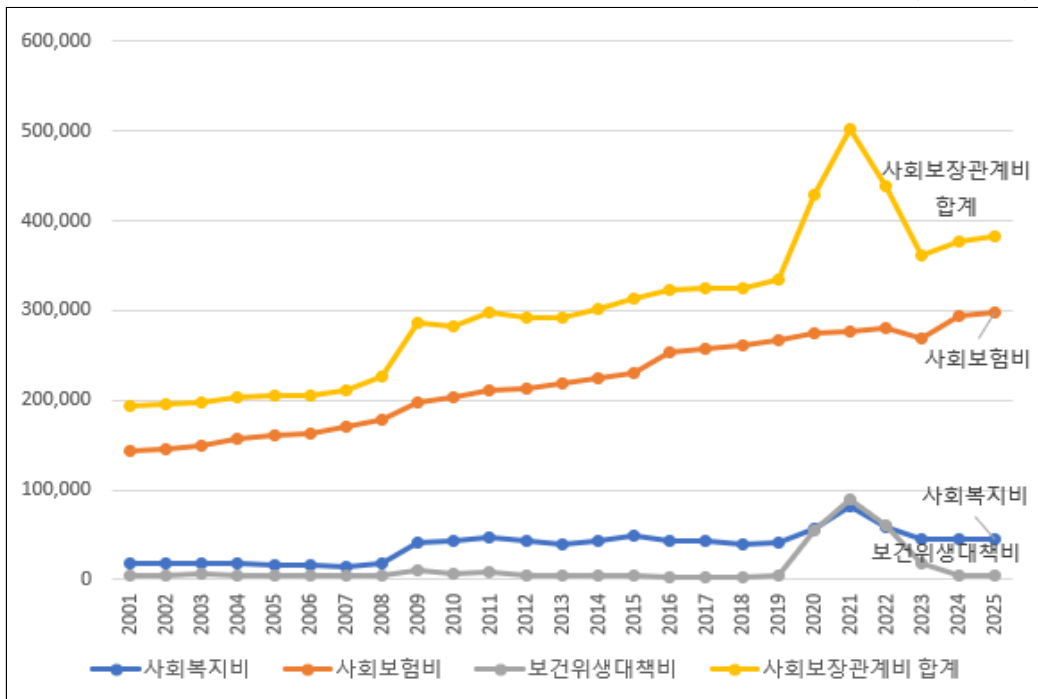


출처: 일본 재무성, 「財政統計(予算決算等データ)」, <https://www.mof.go.jp/policy/budget/reference/statistics/data.htm>, 검색일자: 2025. 6. 4.

- 일본의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장관계비의 세부 항목은 2025년 기준 연금급여비, 의료급여비, 개호 급부비, 사회복지비 등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회보험비를 의미하는 연금·의료 급여비·개호 급부비 항목이 사회보장관계비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임
- (연금·의료 급여비 및 개호 급부비) 연금급여비는 노후 생활의 기반을 지탱하는 연금을 보장하고, 의료급여비는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개호 급부비는 고령화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요양을 보장하는 등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며, 2025년 기준 29조 7398억엔으로 2001년 대비 15조 4,101억엔에서 약 2배 증가하였음

[그림 III-5] 사회보장관계비 세부항목 추이

(단위: 억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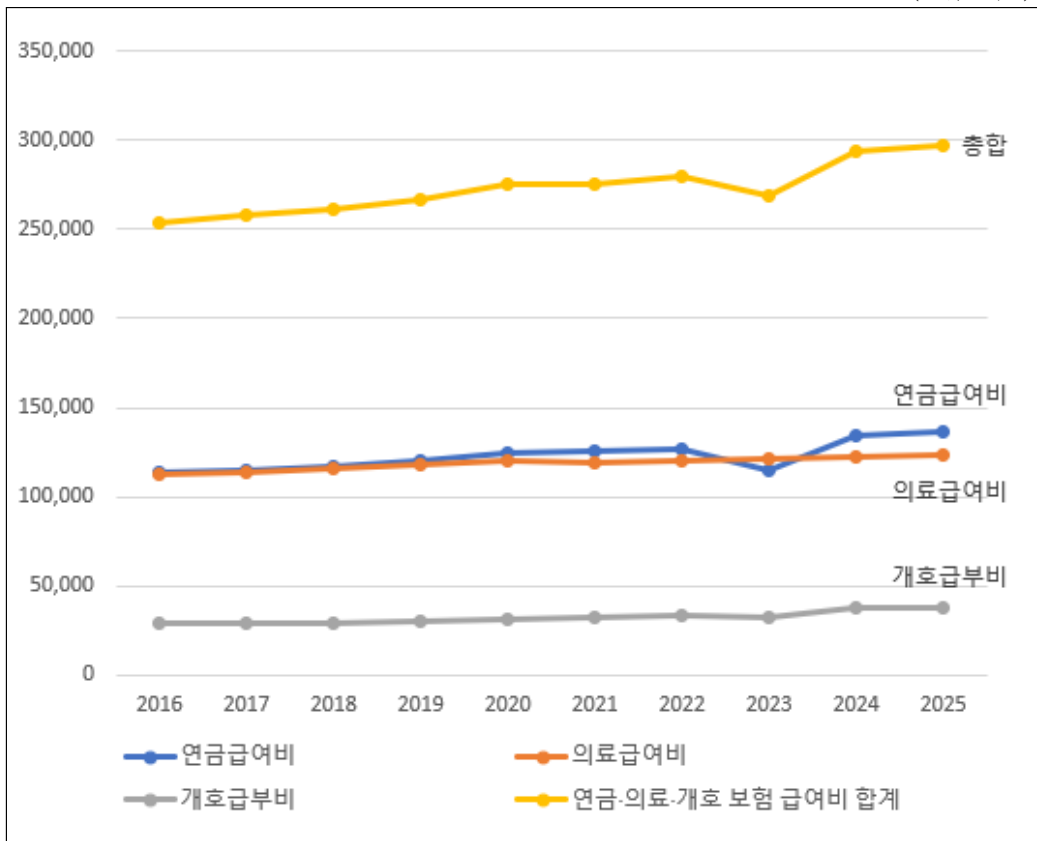


출처: 일본 재무성, 「財政統計(予算決算等データ)」, <https://www.mof.go.jp/policy/budget/reference/statistics/data.htm>, 검색일자: 2025. 6. 4.

- 연금·의료 급여비 및 개호 급부비 세부항목 추이를 보면 2016~2025년 동안 보험 급여비 총 합계는 약 4.35조엔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연금급여비 증가가 전체 확대의 약 54%(2.38조엔)를 차지해 가장 큰 기여 요인임
 - 의료급여비는 약 25%(1.1조엔), 개호 급부비는 약 20%(0.86조엔)를 차지

[그림 III-6] 연금·의료 급여비 및 개호 급부비(사회보험) 세부항목 추이

(단위: 억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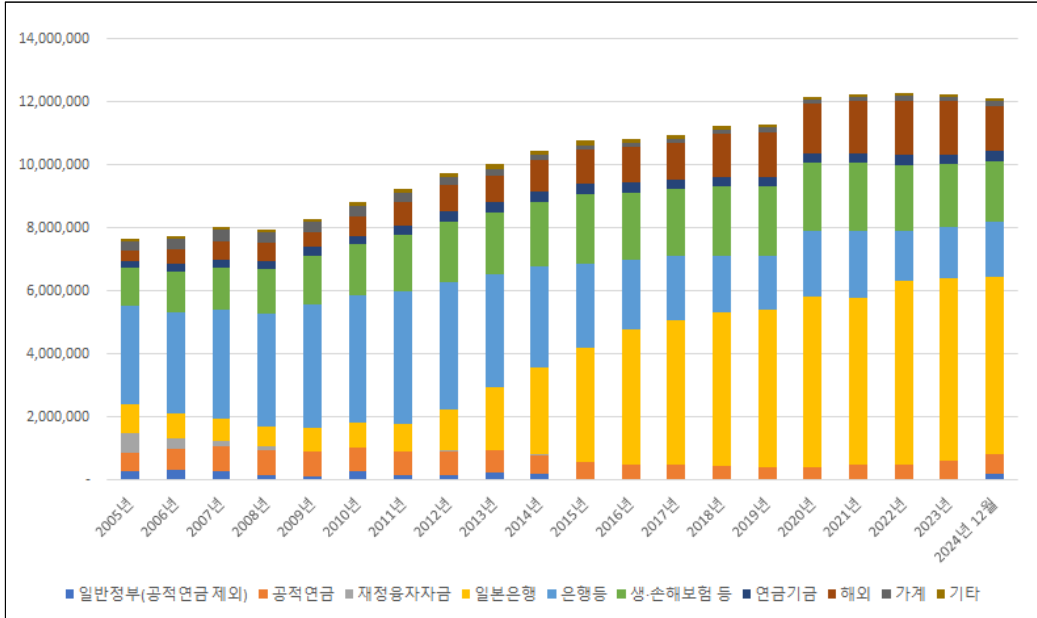
출처: 일본 재무성, 「財政統計(予算決算等データ)」, <https://www.mof.go.jp/policy/budget/reference/statistics/data.htm>, 검색일자: 2025. 10. 2.

- 일본의 국채 등의 보유자별 내역에 따르면 2012년까지는 예금취급기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3년 이후 양적완화 정책에 의해 중앙은행의 점유율이 최대를 기록, 해외의 보유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일본은행) 2005년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는 12% 수준이었으나, 2013년 양적·질적 금융완화(QQE) 정책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46% 수준을 기록
 - 2016년 이후 수익률곡선통제(Yield Curve Control) 도입으로 장기채 매입이 확대되며, 2020년대에는 국채시장 유동성의 대부분이 일본은행에 집중되는 현상이 고착화
 - 野村総合研究所(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중앙은행이 국채발행액의 절반 이상 보유한 상황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언급¹⁷⁾
 - 국채의 유동성을 저하시켜 시장 기능 훼손
 - 기준금리 인상 시 일본중앙은행의 수익이 악화되어 경상수지 적자 위험 발생 우려
 - 일본은행이 정부의 재정 지출을 지원하는 자금 조달 방식을 제공하여 재정 규율 약화를 초래
- (은행 등) 2005년 은행 등 국채 보유는 4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장기금리 하락과 수익률 저하로 인해 은행권의 국채 투자가 감소하였으며, 2015년 이후 일본은행이 대규모 국채를 매입하면서 은행 등 보유 비중이 2024년 기준 14.5%로 급속히 감소
- (해외) 해외투자자는 2005년 4.4%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 이후 엔저와 글로벌 저금리 환경 속에서 해외자금의 일본국채 매입이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됨

17) 木内登英, 「政府の財政健全化目標と日銀の国債買入れ減額 : 政府・国会は日銀頼みの財政運営からの脱却を」, 野村総合研究所, <https://www.nri.com/jp/media/column/kiuchi/20240619.html>, 검색일자: 2025. 11. 19.

[그림 III-7] 일본 국채 등 보유자별 잔고 내역(2024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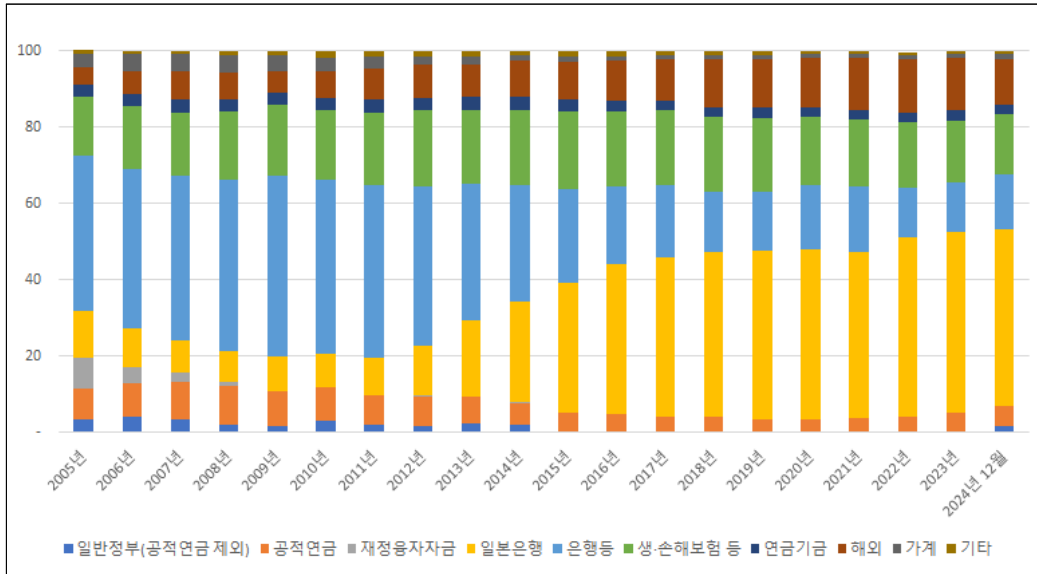
(단위: 억엔)



주: 1. 수치는 회계연도 말 기준. 2023년까지는 확정치, 2024년 12월 말은 속보치
 2. 국채는 재투채를 포함
 3. 은행등에는 유초은행, 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회사를 포함
 4. 생·손해보험 등에는 간포생명을 포함
 5. 기타는 비금융법인기업 및 가계 민간 비영리단체
 6. 자금순환통계상, 국채는 시가, 국고단기증권(T-Bill)은 액면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결산 자료의 수치는 보유 목적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장부가·시가), 자금순환통계의 수치와는 기준이 다름
 출처: 일본 재무성, 『債務管理レポート』, 2015~2025.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림 III-8] 일본 국채 등 보유자별 구성비 내역(2024년 12월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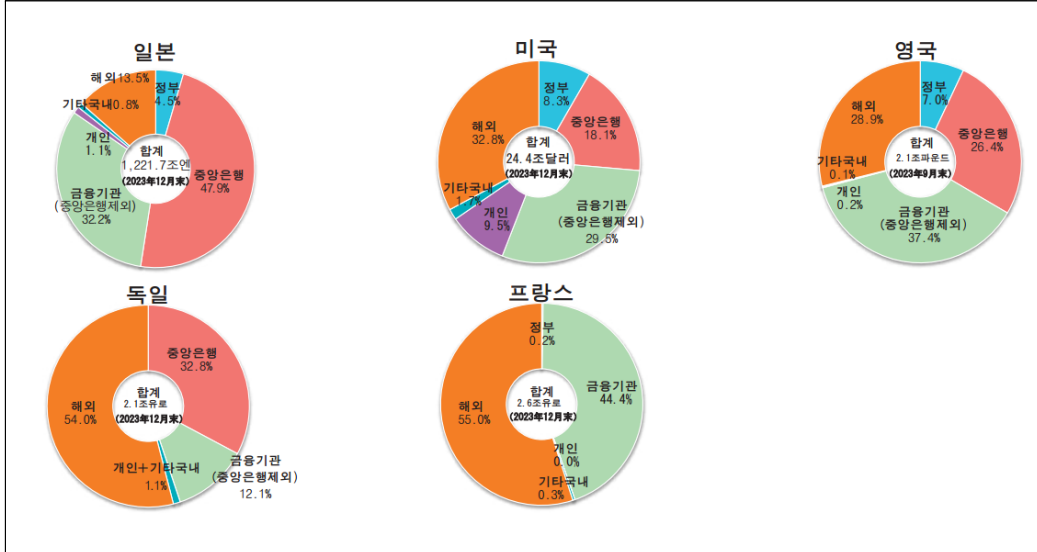


주: 1. 수치는 회계연도 말 기준. 2023년까지는 확정치, 2024년 12월 말은 속보치
 2. 국채는 재투채를 포함
 3. 은행등에는 유초은행, 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회사를 포함
 4. 생·손해보험 등에는 간포생명을 포함
 5. 기타는 비금융법인기업 및 가계 민간 비영리단체
 6. 자금순환통계상, 국채는 시가, 국고단기증권(T-Bill)은 액면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결산 자료의 수치는 보유 목적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장부가·시가), 자금순환통계의 수치와는 기준이 다름
 출처: 일본 재무성, 『債務管理リポート』, 2015~2025.를 바탕으로 재작성

- 각국이 공표한 국채 보유자별 내역에 따르면 일본은 중앙은행의 보유 비율이 47.9%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해외 투자자 비율은 13.5%로 독일(54%)과 약 40% 격차를 보이며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자국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에 유리한 상황이며, 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
- 해외 투자자 비중이 비교적 낮아 글로벌 금리, 지정학적 리스크 등 외부요인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음

[그림 III-9] 국가별 국채 등 보유자별 내역(2023년 12월 기준)

(단위: %)



- 주: 1. 일본은 재정투자채(財投債), 국고단기증권(T-Bill), 개인용 국채를 포함
 2. 미국과 영국은 개인용 국채(저축성 국채)를 포함하지 않음
 3. 독일과 프랑스는 지방채 등을 포함(독일의 정부 보유분 및 프랑스의 중앙은행 보유분은 비공개)

출처: 일본 재무성, 『債務管理レポート2024』, 2024. 6.

- 원출처: 1. 일본: 일본은행, 『資金循環統計』
 2. 미국: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3. 영국: 영국 국가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영국 국채관리청(UK Debt Management Office), 영란은행(Bank of England)
 4. 독일: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
 5. 프랑스: 프랑스은행(Banque de France)

IV. 일본 국가채무의 주요 원인 및 재정건전화 대응

1. 주요 원인¹⁸⁾

가. 고령화에 따른 세출 증가

-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생산연령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하였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00년 17% 수준에서 2025년에는 30% 내외로 상승하였고,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평가
- 일본의 높은 국가채무 수준은 장기적인 고령화로 인해 수십년간 지속된 재정적자와 제로에 가까운 경제성장에 비롯된 것이며,¹⁹⁾ 직접적으로는 연금·보건·장기요양 지출과 같은 사회보장 지출에 압력을 가하고, 간접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영향을 미침²⁰⁾
 - 1990~2012년 중앙정부 채무 증가분의 37%는 사회보장 지출 증가에 기인한 반면, 공공사업 지출의 기여도는 12%에 불과
 - 1990~2010년 일반정부 기준 연금 지출은 GDP 대비 5.2%에서 10.9%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보건 및 장기요양 지출 또한 4.1%에서 8.3%로 2배 이상 증가

18) 일본 내각부, 「平成24年度 年次經濟財政報告書」, 2012. 7., <https://www5.cao.go.jp/j-j/wp/wp-j-e12/index.html>, 검색일자: 2025. 12. 16.

19) YiLi Chien, Ashley H. Stewart, “What’s behind Japan’s High Government Debt?,”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2025. 4. 1., <https://www.stlouisfed.org/on-the-economy/2025/apr/what-is-behind-japan-high-government-debt>, 검색일자: 2025. 12. 4.

20) Ikuo Saito, “Chapter 4. Japan’s Fiscal Risks,” 2015. 3., <https://www.elibrary.imf.org/display/book/9781498324687/ch004.xml>, 검색일자: 2025. 12. 3.

- 공공사업 지출은 1990년대 이후 기여도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
- 일반회계 세출에서 사회보장관계비는 2001년 약 19조엔에서 2025년 약 38조엔으로 확대되었으며, 세출 대비 비중 역시 약 23%에서 33% 이상으로 상승

- 2025년 일본 재정관계자료(財政關係資料)²¹⁾에 따르면 보통국채²²⁾ 잔액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고령화의 진전 등에 따른 사회보장관계비 및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의 증가를 언급
 - 1990년에서 2025년까지 세출 증가는 총 740조엔 규모이며, 그중 사회보장 관계비가 497조엔으로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
 - 1990년대에는 공공사업 관련 비용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었으나, 최근에는 고령화의 진행 등에 따른 사회보장 관련 비용의 증가와 지방재정의 악화에 따른 재원 부족 보전(지방교부세 교부금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부각
 - 지방교부세·교부금 등(93조엔), 공공사업관계비(70조엔)도 세출 확대에 기여했으며, 나머지는 기타세출(채무상환비 제외) 증가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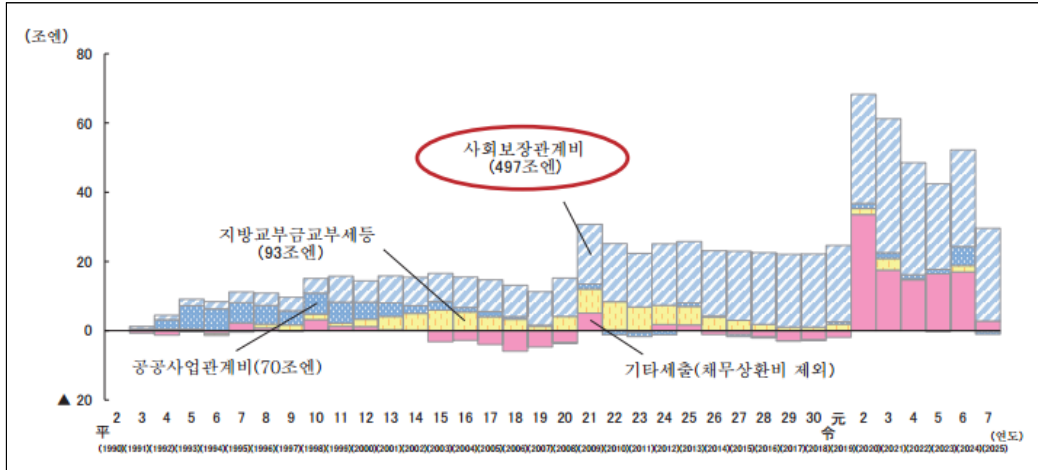
- 연금·의료·개호 등 경기와 무관하게 늘어나는 사회보장 지출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구조적으로 확대하고 잠재성장률을 낮추면서, 재정을 성장 촉진형 지출에서 사회보장 중심 이전지출 구조로 전환시키고 운용 경직성 심화를 야기

21) 일본 재무성, 『日本の財政關係資料』, 2025. 4.

22) 보통국채에는 건설국채, 특례국채, 부흥채,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채(GX 경제이행채), 아동·육아지원 특례공채(아동 특례채) 및 차환채가 있으며, 이들 중 건설국채 및 특례국채는 일반회계에서 발행되고, 그 발행수입금은 일반회계의 세입의 일부가 됨(출처: 일본 재무성, 『債務管理リポート 2024』, 2024.)

[그림 IV-1] 일본 보통국채 잔액의 세출 증가 요인

(단위: %)



주: 1. 2023년까지는 결산, 2024년은 보정 후 예산, 2025년은 예산(수정 후)이며, 2024년 세출액에는 2023년에서 2024년으로의 이월액을 포함
 2. 부흥채(2011년은 일반회계에서, 2012년 이후는 동일본대지진부흥특별회계에서 부담)를 보통국채 잔액에서 제외함과 동시에(2025년 말에 4.6조엔), 2011년 세출 중 부흥채 발행에 관한 것(7.6조엔)을 제외
 출처: 일본 재무성, 『日本の財政関係資料』, 2025. 4.

나. 경기 악화 및 감세로 인한 세수 기반 약화

- (경기 악화로 인한 세수 감소) 2008~2009년 리먼 쇼크와 2011~2012년 동일본대지진 등 경기 악화 충격으로 소득세·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크게 감소했고, 이후의 증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일시적(순환적) 반등에 기인
 - 2000년대 중반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세입이 증가하였으나, 2008~2009년 리먼 쇼크 이후 경기 급락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대폭 감소
 - 2010년도에는 경기 회복에 따라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구조적 회복이라기보다는 경기 순환적 요인에 기인함
 - 2011~2012년도에는 동일본대지진의 충격으로 세입이 하방 압력을 받았으며 경기의 완만한 회복에 따른 소비세 증가가 기대되었으나, 전체 세입 규모는 '약간의 증가' 수준

- (소득세수 감소의 구조적 요인) 버블붕괴 이후 금리·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소득 기반 축소와 장기침체·제도적 감세 누적·세원 이양으로 과세 기반이 약화되며, 소득세수는 1990년 대비 2010년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
 - 이자·배당 등에 대한 분리과세 소득 감소, 버블기 이후 금리 및 자산가격 하락으로 금융소득 기반 축소
 - 장기 침체에 따른 임금 상승 둔화와 1990년대 이후 누진구조 완화, 소득공제 확대 등 제도적 감세 누적, 2000년대 중반 이후 지방으로의 세원 이양으로 국세 소득세 기반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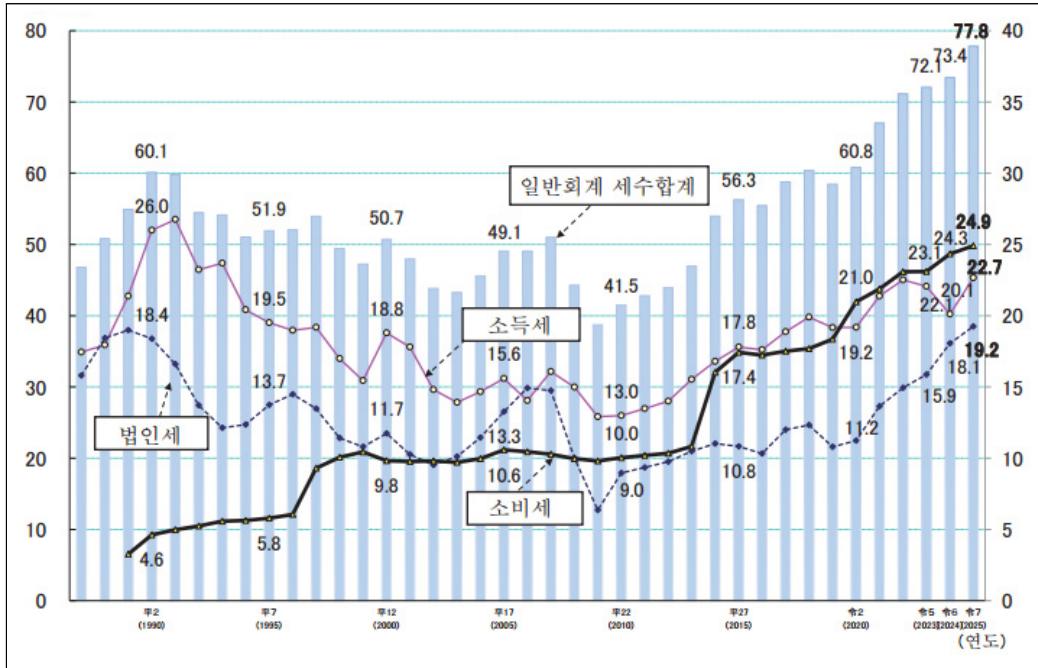
- (법인세수 감소의 구조적 요인) 경기침체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1998~1999년 법인세율 및 2011년 실효세율 인하와 이월결손금 공제 확대로 인해 법인세수는 버블붕괴 이후 감소해 2010년에는 1990년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
 -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수익성 저하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
 - 기업의 활력과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1998~1999년 법인세율, 2011년 법인 실효세율 인하
 - 1998년에는 법인세의 기본세율을 37.5%에서 34.5%로 인하하고, 1999년에는 34.5%에서 30.0%로 추가 인하
 - 2011년 세제 개정에 의해 법인세율을 40.69%에서 35.64%까지 인하

- 일본 정부는 장기 침체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과 감세 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저성장 구조 속에서 세수 회복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재정적자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상시적 구조로 고착화

- 2010년 이후에는 기업이익 확대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와 2014년·2019년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인해 세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디플레이션 탈피·경제 성장·임금상승을 목적으로 한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 기본방침, 경제·재정재생계획 등 재정건전화 정책이 추진되며 세입 기반이 강화되었으나, 세수 증가세는 세출 증가세에 미치지 못한 상황

[그림 IV-2] 일반회계 세수의 세부항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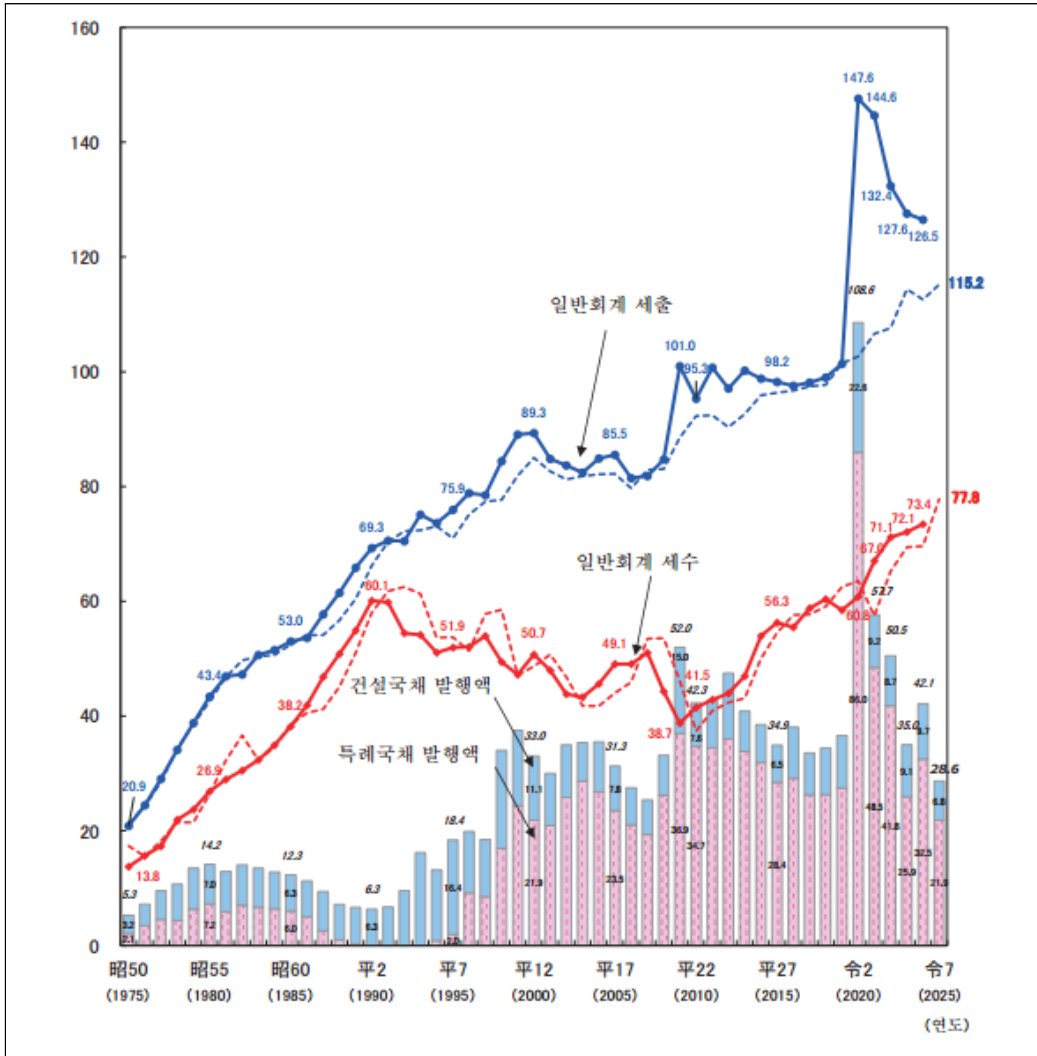
(단위: 조엔)



주: 1. 2023년까지는 결산, 2024년은 보정 후 예산, 2025년은 예산(수정 후)
출처: 일본 재무성, 『日本の財政関係資料』, 2025. 4.

[그림 IV-3] 일반회계 세출·세수 추이

(단위: 조엔)



주: 1. 2023년까지는 결산, 2024년은 보정 후 예산, 2025년은 예산(수정후)이며, 점선은 당초 예산
 2. 특례국채 발행액은 1990년은 고틱 지역에서 평화 회복 활동을 지원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임시특별 국채, 1994~1996년은 소비세율 3%에서 5%로의 인상에 앞서 실시한 감세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감세특별국채, 2011년은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위해 실시하는 시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부흥채, 2012년, 2013년은 기초연금 국고부담 2분의 1을 실현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연금특별국 채를 제외

출처: 일본 재무성, 『日本の財政関係資料』, 2025. 4.

2. 재정건전화 대응 정책²³⁾²⁴⁾²⁵⁾²⁶⁾²⁷⁾ 현황

가. (2000년대) 세제·세출 일체 개혁과 사회보장·지방재정·공공부문 등 중심의 지출 효율화

- (주요 정책 노력) 「2002~2009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 기본방침(骨太方針)」은 5~10년 내 기초재정수지 흑자와 채무비율 안정·하락을 목표로, 국채에 의존하지 않도록 세출 삭감과 세제 개편을 병행하고 사회보장 제도개혁, 지방재정의 보조금·교부세·세원이양 재조정, 공익법인·특별회계·독립행정법인 등 공공지출을 대폭 감축·효율화
-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 기본방침 2002) 2010년까지 기초재정수지 흑자라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국채에 의존하지 않는 세제·세출 개혁의 일체 추진, 사회보장·지방재정·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효율화
 - 사회보장 지출은 제도개혁으로 관리, 지방재정은 보조금·교부세·세원이양을 포함한 세원배분방식을 삼위일체로 검토해 교부세 의존을 줄이며, 공공부문은 민간위탁·전자정부·조달 효율화 등으로 정부 운영비를 절감
-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 기본방침 2006) 기초재정수지 흑자 달성과 이후 채무비율 하락을 위해 향후 5년 세출감축을 구체화하고, 독립행정법인 포함 전면적 지출·자산·특별회계 개혁과 사회보장 증점화·효율화로 국민·미래세대 부담 최소화
 - 2011년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에 필요한 16.5조엔을 세출 삭감(11.4조~14.3조엔)과 세제개편(2.2조~5.1조엔)으로 조달 계획

2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재정운용변화 및 시사점」, 재정지출분석센터 내부자료, 2014. 11.

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일본 잃어버린 20년 재정·금융정책 사례 및 성과연구」, 재정지출분석센터 내부자료, 2015. 5.

2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근 주요국의 재정개혁 사례 연구」, 재정지출분석센터 내부자료, 2020. 3.

2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년대 일본의 재정건전화 정책」, 재정지출분석센터 내부자료, 2019. 12.

2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재정운용계획 총량반-재정지출구조조정 해외사례」, 재정지출분석센터 내부자료, 2024. 4.

〈표 IV-1〉 기본방침 2006에서 제시된 향후 5년간 세출개혁 개요

(단위: 조엔)

구분	2006년도	2011년도		삭감액	비고
		개혁 미실시	개혁 실시		
사회보장	31.1	39.9	38.3	-1.6	
인건비	30.1	35.0	32.4	-2.6	
공공투자	18.8	21.7	16.1~17.8	-5.6~-3.9	공공사업관계비: -3~-1% 지방단독사업(투자적 경비): -3~-1%
기타분야	27.3	31.6	27.1~28.3	-4.5~-3.3	과학기술진흥비: 1.1%~경제성장률 범위 이내로 억제 ODA: -4~-2%
합계	107.3	128.2	113.9~116.8	-14.3~-11.4	

필요금액: 16.5

원출처: 일본 내각부, 「經濟財政運営と構造改革に関する基本方針2006」, 2006. 7. 7., p. 48.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근 주요국의 재정개혁 사례 연구」, 재정지출분석센터 내부자료, 2020. 3.

-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 기본방침 2009) 채무비율의 중기 안정·장기 하락과 10년 내 기초재정수지 흑자, 5년 내 기초재정수지 적자 반감을 재정건전화 목표로 제시하고, 2009년 예산안에 공익법인·특별회계·행정부용·장기사업·독립행정법인 지출을 대폭 삭감·정비해 재정건전화를 추진
 - 국가 및 독립행정법인 등에서 공익 법인으로서의 지출에 대해 철저한 재검토 시행, 2006년 지출실적 대비 약 40% 삭감
 - 각 특별회계와 3년 이상 지속된 개별 사업 등에 대해 필요성을 제로베이스로 재검토
 - 레크리에이션 경비 원칙 폐지하고 홍보경비, 수탁조사비, 택시비 등에 대해 정부 전체 예산액을 전년 대비 30% 이상 삭감

나. (2010~2017년) 국채억제·PAYGO 기반의 세출·세입 일체 개혁과 소비세 등 증세를 통한 사회보장 자원 확보, 경제·재정재생계획 (2015) 수립

- (주요 정책 노력) 재정운영전략(2010)은 기초재정수지 적자 감축, 2020년 흑자, 채무비율 하락을 목표로 국채억제·PAYGO·세출 삭감과 세입개편을 추진하고, 사회보장·세계 일체 개혁(2012)은 소비세 등 증세로 재원을 마련해 연금·의료·개호·저출산 대책에 한정 투입하며 소득·상속 과세 강화로 사회보장 지속가능성을 확보
- (재정운영전략 2010) 2015년까지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2010년의 절반으로 줄이고 2020년까지 흑자로 전환한 뒤 2021년 이후 채무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면서, Pay-as-you-go·재정적자 감축·구조적 지출 자원 확보·세출 검토·지방재정 안정 운용이라는 재정운영 원칙 아래 매년 재정지표와 목표 진척을 점검·공표하겠다는 중장기 재정건전화 방침
 - 2009년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이룬 다음 처음으로 발표한 재정건전화 계획
 - 새 정책 도입 시에는 영구적 세출 삭감·세입 확충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기초재정수지 개선 등 매년 재정개선을 추진하며, 사회보장 등 구조적 지출에는 세입·세출 양면 개혁을 통해 안정적 재원을 마련
 - 모든 세출 분야의 사업에 대해 필요성, 집행 효율성 등을 지속 재검토해 세출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와 지방이 동일한 재정운영 원칙 아래 협력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함께 확보
 - 국채 발행을 2010년 수준(약 44조엔) 이하로 억제하고, 세입은 소득세·법인세·소비세 등 전반을 개편하되 세수 감소 조치에는 대응 재원을 확보하는 원칙을 적용
 - 세출은 2011~2013년 기초재정수지 대상 경비를 영구적으로 삭감하고 전년도 당초 예산 규모를 넘지 않도록 강력히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
- (사회보장 및 세계 일체 개혁안 2012) 「재정운영전략 2010」에서 제시한 재정건전화 목표와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육·의료·개호·연금·사회안

전망 확충과 그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제시

- 현 5%(지방소비세 1% 포함)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 8%(지방소비세 1.7% 포함), 2015년 10월 10%(지방소비세 2.2% 포함)로 「소비세법」 개정안 제출²⁸⁾²⁹⁾
 - 소비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개혁으로 확보한 재원으로 기초연금의 국고부담 비율을 1/2로 영구화
 - 소비세(지방소비세 제외)는 정부 비대화가 아니라 연금·의료·개호 등 사회보장 급부와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만 사용
 - 소득세는 과세소득 5,000만엔 초과 구간에 45% 세율을 신설해 2015년도부터 적용
 - 상속세는 기초공제를 5,000만엔에서 3,000만엔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50%에서 55%로 올리는 개편을 검토
-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 2015) 경제·재정재생계획을 수립, 2020년도 기초 재정수지 흑자 실현을 목표로 하여, ‘디플레이션 탈출과 경제 재생’, ‘세출 개혁’, ‘세입 개혁’의 세 가지 주요 개혁을 일체적으로 추진
- 세출 개혁은 ‘공공 서비스의 산업화’, ‘인센티브 개혁’, ‘공공 서비스 혁신’을 골자로 공공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고 경제에 하방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공공 지출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세입 개혁은 경제 환경을 정돈하고 소비세율을 2017년 4월에 10%로 인상³⁰⁾

28) 박형수 외, 『일본 소비세율 인상의 평가와 전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7.

29) 소비세율 개정안 중 2014년 8%로 인상은 단행되었지만, 10%로 인상은 여러 차례 연기 후 2019년에 시행

30) 이후 시행 시점이 연기되어 실제로는 2019년 10월 시행

다. (2018~2025년) 신경제·재정재생계획, 세출개혁·와이즈스펜딩을
축으로, 사회보장·지방지출 관리와 국채·세제개혁을 병행

-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 2018) 신경제·재정재생계획 수립,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 시기를 기존 2020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까지로 연장하는 새로운 재정건전화 목표를 설정, 2019~2021년 예산 편성과 연계하여 사회보장비·일반세출·지방세출의 지출 수준 목표를 설정
 - 신경제·재정재생계획은 기존 틀을 바탕으로 2021년까지 3년간 통합적인 세출 분야별 세출 수준에 대한 규율을 세우고, 각 분야의 개별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공정을 정립하며 이행 상황을 검증하여 추가 조치를 검토
 - 사회보장비는 고령화로 인한 불가피한 증가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비사회보장 일반세출은 경제·물가 여건을 반영하되 기존 세출개혁을 지속
 - 지방세출은 국가 일반세출 기조에 맞추되, 지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반재원 총액을 2018년 지방재정계획 수준(실질 동일 수준) 이상으로 확보

-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 2023) 새로운 자본주의(성장·분배·포용) 전략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2025년까지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목표로, 증거기반정책수립(EBPM)³¹⁾을 기반으로 한 와이즈스펜딩³²⁾으로 행정·재정개혁 추진, 세출·세입 다년도 조정과 중장기 경제·재정계획을 통해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를 병행
 -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세출 구조를 평시로 조정
 - 민간수요 촉진과 중장기 투자를 병행하되, 와이즈스펜딩으로 저효율 세출은 감축하고 고효율 세출로 재배분해 행정·재정개혁을 추진

31) 증거기반정책수립(Evidence-based Policy Making, EBPM)은 통계데이터를 이용한 객관적인 정보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

32) 세출 재검토를 통해 정책 효과가 낮은 세출을 철저히 삭감하고 정책 효과가 높은 세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

-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 2025) 2025~2026년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과 채무비율의 코로나19 이전 수준 감축을 목표로, 국채관리·세출개혁(와이즈스펜딩)·사회보장비 관리·포괄적 세제개혁을 병행
 - 국채 수급 불안에 따른 장기금리 급등 억제 및 유사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국내 국채 보유 촉진 등 안정적 국채관리와 건전재정 운영 도모
 - 2027년까지 세출개혁 노력 지속, 매년 예산 편성에 경제·물가 동향을 감안해 적절히 반영하며, 사회보장비는 현장 실정과 세수·재정 상황을 고려해 관리
 - 소득세 근본개혁·공제 재검토, 과세 공평성·집행체제 강화, 국제과세 규칙 대응 등 포괄적 세제개혁 검토
 - EBPM 기반 와이즈스펜딩으로 세출을 재점검해 저효율 지출은 삭감, 고효율 지출로 전환 및 세출 구조의 평시화 추진

3. 재정건전화 대응 정책 주요 성과³³⁾³⁴⁾³⁵⁾³⁶⁾

-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 2003」에서 국고보조부담금·지방교부세·세원 이전을 포함한 세원배분 재검토의 일체적 개혁(삼위일체 개혁) 방침 제시 및 추진을 통해 국고보조부담금·세원 이전·지방교부세(임시재정대책채 포함) 개혁을 2006년도까지 실현
 - 2006년도까지 약 4.7조엔의 국고보조부담금 개혁, 약 3조엔의 세원 이전, 약 5.1조엔의 지방교부세 및 임시재정대책채 개혁을 실현

33) 일본 내각부, 「平成19年度 年次經濟財政報告書」, 2007. 8., <https://www5.cao.go.jp/j-j/wp/wp-j-e07/07b00000.html>, 검색일자: 2025. 12. 14.

3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재정운용계획 총량반-재정지출구조조정 해외사례」, 재정지출분석센터 내부자료, 2024. 4.

3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근 주요국의 재정개혁 사례 연구」, 재정지출분석센터 내부자료, 2020. 3.

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년대 일본의 재정건전화 정책」, 재정지출분석센터 내부자료, 2019. 12.

- 2003년 이후 재정수지 개선에는 구조적 기초재정수지(Structural primary balance) 개선이 큰 기여를 했으며, 순이자지급비의 감소, 세수 증가에 따른 순환적 재정수지(Cyclical fiscal Balance) 개선도 복합적으로 작용
 - (세입 기여) 2002년도에는 재정수지에 부정적 영향이 컸으나 2003년에는 소득세·간접세의 부정적 영향이 크게 축소, 법인세는 긍정적 영향으로 전환되고, 2004년 이후에는 소득세·간접세·법인세 모두 긍정적으로 기여
 - (세출 기여) 2000년도 이후 세출은 재정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이 지속, 특히 2004년도까지 공공투자 삭감이 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
 - 반면 고령화를 반영하여 사회보장비는 일관되게 마이너스(-) 기여

- 2007년도 지방재정계획에서도 세출 삭감 노선을 유지하며 일반세출을 억제하고, 자원 부족에 대한 보전조치를 병행
 - (세출 억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 2006」에 따라 급여관계비·투자적 경비를 삭감하는 등 지방세출을 엄격히 재검토하여 일반세출을 1.1% 감소로 억제
 - (세입·재원 확보) 지방세 부담의 공평·적정화 및 안정적 재정운영에 필요한 일반재원 총액 확보를 기본으로 하면서, 대규모 자원 부족에 대해서는 운영상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보전조치를 강구
 - (계획 규모) 계획 총액은 83조 1,261억엔, 전년도 대비 247억엔 감소

- 2007년도 예산에서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 2006」에 규정된 세출 개혁 내용에 따라 사회보장·공공사업 등 각 분야 개혁을 확실히 이행하며 세출개혁을 강화, 신규 국채발행액을 큰 폭으로 감축
 - (사회보장비 감축) 제도·시책 재검토를 통해 고령화 등에 따른 세출 증가를 약 2,200억엔 감축
 - (공공사업 삭감) 종전의 개혁 노력을 지속하여 3%를 상회하는 삭감 실시
 - (일반세출 관리) 세수의 대폭 증가를 전망하는 가운데, 특별회계 개혁 영향 등을 제외하면 일반세출 증가는 실질적으로 약 0.3조엔 수준 이내로 억제

- (특별회계·특정재원 개혁) 특별회계 개혁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도로 특정재원의 재검토도 추진
 - (지방교부세 등) 법정률분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세출 재검토 등을 통해 가능한 한 억제하여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약 0.4조엔 증가 범위 내로 관리
 - (국채비 등) 교부세 특별회계의 국 부담분 차입금을 일반회계로 승계하고 상황을 개시, 채무상환비 증가 약 1.7조엔을 포함하여 국채비는 약 2.2조엔 증가
 - (국채발행 감축·실질 건전화) 신규 국채발행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약 4.5조엔 감액, 채무상환 개시 효과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약 6.3조엔 규모의 재정 건전화를 달성
- 2012년 1월 발표된 「재정운영전략 이행상황 확인」에 따르면 신규 국채발행액이 소폭 감소하고 GDP 대비 공채잔고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남
- (국채발행 규모 억제) 2012년도 예산 신규 국채발행액은 44조 2,440억엔으로, 2011년도(44조 2,980억엔) 대비 소폭 하회
 - (세입 개혁) 사회보장·세제 일체 개혁 초안(2012. 1. 6.)을 통해 소비세율을 2014년 4월 8%, 2015년 10월로 인상하는 등 세제개혁 방향 제시
 - (세출 개혁) 기초재정수지 대상경비는 2012년도 예산에서 약 68조 3,897억엔으로, 중기재정프레임상 2012년도 예상치(68.4조엔)와 큰 차이 없이 억제
 - 사회보장비(2011년 대비 △ 8.1%), 연금관계비(2011년 대비 △ 11.2%)가 크게 감소
 - 공무원 정원·급여 감축과 행정기관 운영비 절감 등 공무원 세출 삭감
- 사회보장 및 세제의 일체 개혁안(2012)의 주요 세제 개편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의 안정재원 확보 등을 위한 소비세법 등 일부 개정 법률」(2012. 8. 10.)이 통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비세 세수가 크게 증가하였음
- 소비세율을 2014년 4월 8%, 2015년 10월까지 10%³⁷⁾로 단계적으로 인상

37) 10%로의 인상은 이후 연기되어 실제로는 2019년 10월에 인상이 이루어짐

- 인상된 소비세 세수는 국가에 346/500, 지방에 154/500 배분
- 2014년 소비세 세수가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전년 대비 증가율 48.0%)하였으며,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

〈표 IV-2〉 일본의 주요 세목별 세수(국세)

(단위: 조엔)

세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소득세	13.0	13.5	14.0	15.5	16.8	17.8	17.6	18.9	19.9
	(0.5)	(3.8)	(3.8)	(11.0)	(8.1)	(6.1)	(-1.1)	(7.2)	(5.4)
법인세	9.0	9.4	9.8	10.5	11.0	10.8	10.3	12.0	12.3
	(4.1)	(4.3)	(4.4)	(7.5)	(5.1)	(-1.9)	(-4.6)	(16.1)	(2.7)
소비세	10.0	10.2	10.4	10.8	16.0	17.4	17.2	17.5	17.7
	(2.3)	(1.6)	(1.5)	(4.6)	(48.0)	(8.7)	(-1.1)	(1.7)	(1.0)
기타	9.5	9.8	9.8	10.1	10.1	10.2	10.3	10.4	10.5
합계	41.5	42.8	43.9	47.0	54.0	56.3	55.5	58.8	60.4
	(7.1)	(3.2)	(2.6)	(6.9)	(14.9)	(4.3)	(-1.5)	(6.0)	(2.7)

주: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근 주요국의 재정개혁 사례 연구」, 재정지출분석센터 내부자료, 2020. 3.

-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 2018·2019」에서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하는 것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
 - 2019년 10월 소비세율 인상과 기업수익에 의한 법인세 수입 증가로 세수는 2019년 57.4조엔에서 2023년(당초 예산) 68.5조엔으로 증가
 - 소비세율이 회계연도 중간(2019년 10월)에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인상효과가 2020년 +4.5%로 나타나, 세율 인상 국면에서 소비세가 세수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크게 기여³⁸⁾
 - 1997년 3%에서 5%로 인상 시 +6.2%, 2014년 5%에서 8%로 인상 시 +11.1%, 2019년 10월 8%에서 10% 인상 시 +4.5%

38) Nobuo Iizuka, "Japan's Tax Revenue Records Historical High for 3rd Consecutive Year," *ECONOMIC INDICATORS FOR JAPAN*, 2023. 10., https://www.jef.or.jp/journal/pdf/251st_Economic_Indicators.pdf, 검색일자: 2025. 12. 17.

V. 일본 국가채무 관리의 주요 리스크 및 외부평가보고서

1. 주요 리스크

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가능성

- 일본의 보통국채잔고는 1975년 당시 약 15조엔에서 2025년에는 1,129조엔으로 50년간 약 75배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누적된 국가채무는 금리 변화에 민감한 재정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경기부양 및 재정수요 확대로 국채 발행이 급증하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와 2020년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그 증가폭이 커졌으며, 2025년에는 1,129조엔 수준에 도달
- 일본은행은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지속적·안정적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하여 금융 완화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2024년 3월부터 3차례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하여 마이너스(-) 금리에서 0.5%로 인상³⁹⁾⁴⁰⁾⁴¹⁾하며 금리인상 기조로 전환

39) 일본은행, 「金融政策の枠組みの見直しについて」, 2024. 3. 19., https://www.boj.or.jp/mopo/mpmdeci/state_2024/k240319a.htm, 검색일자: 2025. 8. 20.

40) 일본은행, 「金融市場調節方針の変更および長期国債買入れの減額計画の決定について」, 2024. 7. 31., https://www.boj.or.jp/mopo/mpmdeci/state_2024/k240731a.htm, 검색일자: 2025. 8. 20.

41) 일본은행, 「金融市場調節方針の変更について」, 2025. 1. 24., https://www.boj.or.jp/mopo/mpmdeci/state_2025/k250124a.htm, 검색일자: 2025. 8. 20.

- 2024년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마이너스(-)금리에서 0~0.1%로 설정하고, 7월에는 0.25%, 2025년 1월에 0.5%로 인상
 - 이후 각국의 통상정책 등 글로벌 경제불확실성 등에 의해 2025년 6월 기준 정책 금리 0.5%로 유지하고 있으나, 우에다 총리는 경제·물가 전망이 실현되어 가는 경우에는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한다고 언급⁴²⁾
- 재무성 2025년도 예산의 향후 연도 세출·세입에 대한 영향 시산⁴³⁾에 따르면 향후 명목경제성장률이 연 3%,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 수준을 유지하고, 금리가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2.5%까지 상승할 경우, 국채 이자지출비용은 2025년 약 10조 5,000억엔에서 2028년에는 약 16조 1,000억엔으로 3년 만에 약 53% 증가할 것⁴⁴⁾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자 부담 가능성이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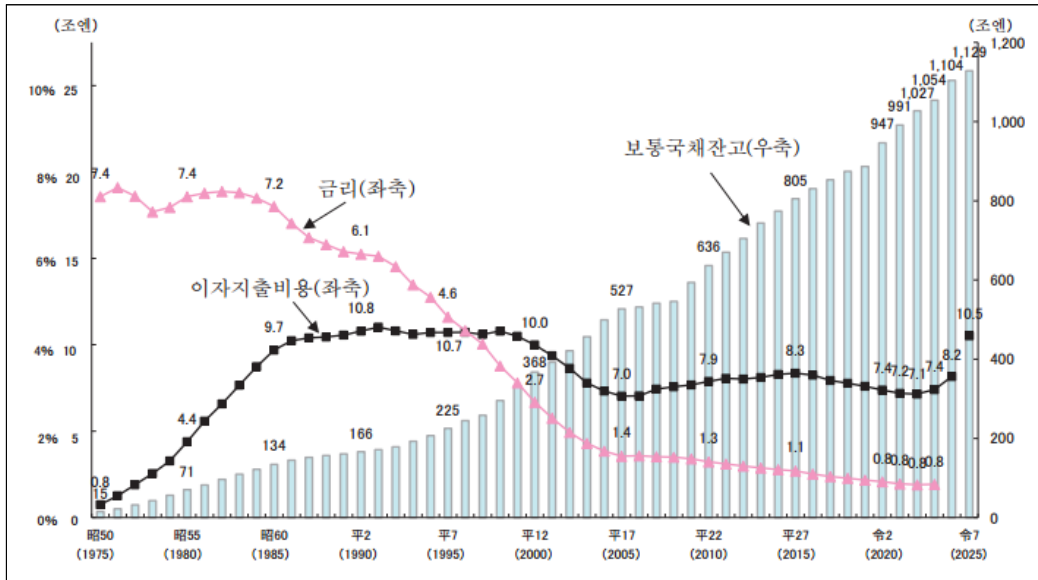
42) 일본은행, 「金融市場調節方針の変更について」, 2025. 1. 24., https://www.boj.or.jp/mopo/mpm-deci/state_2025/k250124a.htm, 검색일자: 2025. 8. 20.

43) 2025년도 예산의 향후 연도 세출·세입에 대한 영향 시산은 일정한 경제 전제를 가정한 후, 2025년도 예산에 포함된 제도·시책을 전제로 향후 2028년도의 세출·세입을 기계적으로 추산한 것

44) 일본 재무성, 「令和7年度予算の後年度歳出・歳入への影響試算」, 2025. 1., <https://www.mof.go.jp/policy/budget/topics/outlook/sy2025a.pdf>, 검색일자: 2025. 5. 25.

[그림 V-1] 이자지출비용과 금리 추이

(단위: 조엔, %)



- 주: 1. 이자지출비용은 2023년도까지는 결산에 따른 수치이며, 2024년도는 보정 후 예산, 2025년도는 수정된 예산에 따른 수치임
- 2. 금리는 보통국채의 이자율 가중평균값을 사용
- 3. 보통국채 잔액은 각 회계연도 3월 말 현재 잔액이며, 2024년도는 보정 후 예산, 2025년도는 예산에 따른 추정치임

출처: 일본 재무성, 『日本の財政関係資料』, 2025. 4.

나.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위험 및 사회보장지출 증가

- 2023년 10월 기준 일본의 총 인구수는 1억 2,435만명인 가운데 그중 65세 이상 인구는 3,623만명으로 총 인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율(고령화율)은 29.1%이며, 65세 이상 1명당 현역 세대 부양 비율은 2.0명으로 나타남

- 장래추계인구⁴⁵⁾에 따르면 2070년 기준 일본 총 인구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일정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고령화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65세 이상 1명당 현역 세대 부양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
 - 총 인구수는 2031년 1억 2,000만명을 하회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70년에는 8,70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
 - 65세 이상 인구수는 2043년 3,953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지만, 총 인구수 감소로 인해 2070년 고령화율은 2023년 대비 9.6%p 증가한 38.7%가 될 것으로 전망
 - 65세 이상 인구 1명당 현역 세대 부양 비율은 2023년 기준 2.0명에서 고령화율 상승, 현역 세대 비율 감소로 인해 2070년에는 현역 세대 1.3명이 1명의 65세 이상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사회가 도래될 것으로 전망

- 연금, 의료, 요양보험 등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1명당 현역 세대 부양 비율 감소로 인해 재정적자 확대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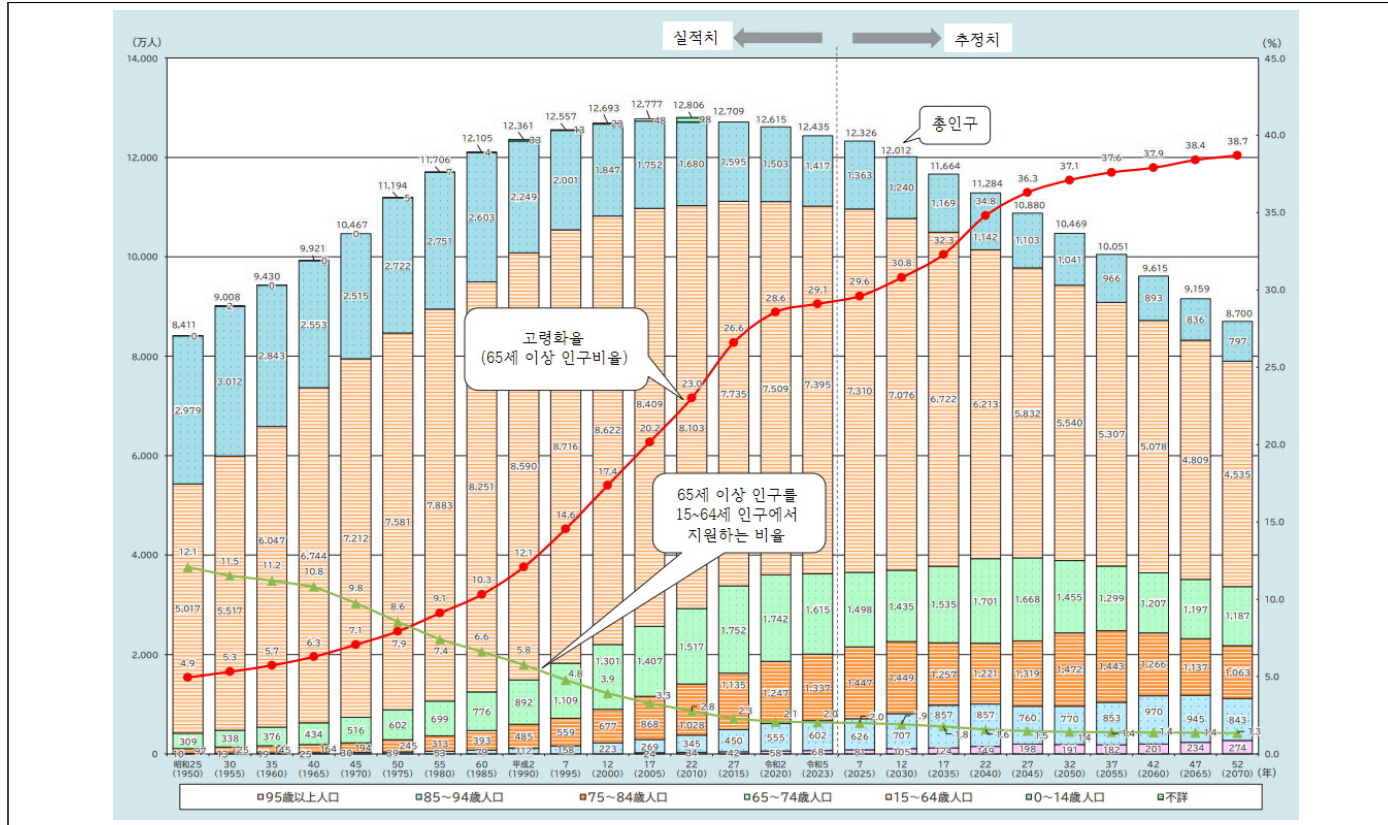
- AMRO에 따르면 일본은 인구 고령화로 가계 저축률이 감소해 2030년경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정부 채무가 가계 저축을 초과하게 되면 차입비용 상승, 시장 변동성 확대, 금융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⁴⁶⁾

45) 장래추계인구(将来推計人口)는 전국의 장래 출생, 사망 및 국제 인구 이동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장래 인구 규모와 연령 구성 등 인구 구조의 추이를 추계한 것이며,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서 발표

46) Paolo Hernando, "Japan's Fiscal Crossroads: Navigating High Public Debt and Aging Challenges," AMRO, 2025. 3. 26., <https://amro-asia.org/japans-fiscal-crossroads-navigating-high-public-debt-and-aging-challenges>, 검색일자: 2025. 10. 27.

[그림 V-2] 고령화 추이와 향후 전망 추계

(단위: 조엔, %)



원출처: 2020년까지는 총무성 「국세조사」, 2023년은 총무성 「인구추계」(2023년 10월 1일 현재(확정치)), 2025년 이후는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장래추계인구(2023년 추계)」의 출생·중위·사망·중위 가정에 의한 추계 결과임

출처: 일본 내각부, 「令和6年版高齢社会白書(全体版)」, https://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24/html/zenbun/s1_1_1.html, 검색 일자: 2025. 5. 20.

다.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준칙 부재

- 일본은 지출준칙, 재정수지준칙, PAYGO(Pay-as-you-go) 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재정준칙(fiscal rule)을 운용해 왔으나, 대부분 법적 구속력과 일관된 운용 메커니즘 부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내각 결정 수준(정책적 목표)에 머무르며,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 지출준칙은 2018회계연도 이후 정부 총지출 한도⁴⁷⁾에 대한 제한이 없어 2018 회계연도부터 준칙으로 간주되지 않음
- 재정수지준칙은 1947년부터 「공공재정법(The Public Finance Law)」 제4조를 근거로 법적 구속력이 있으나, 적자국채(특례국채, special deficit-financing bonds) 발행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 상실⁴⁸⁾
 - 이러한 적자국채는 일본 국가채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PAYGO 제도는 채무, 적자, 지출과 같은 총량 재정 지표에 대해 수치화된 제한을 설정하기 않기 때문에 IMF에서는 재정준칙으로 분류하지 않음⁴⁹⁾
-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 2025」⁵⁰⁾을 통해 ‘국가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를 2025~2026회계연도까지 흑자로 전환하고, GDP 대비 채무잔고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감축한다’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재정건전화 목표를 설정

47) 정부 총지출한도는 채무상환, 이자비용을 제외한 일반회계 총지출이 전년도 일반회계 총지출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출처: IMF, *FISCAL RULES AT A GLANCE:AN UPDATE 1985-2021*, 2022. 1.)

48)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Japan’s national budget Procedure and the public debt burden,” 2016. 2.,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16/577985/EPRS_BRI\(2016\)577985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16/577985/EPRS_BRI(2016)577985_EN.pdf), 검색일자: 2025. 7. 1.

49) IMF, *FISCAL RULES AT A GLANCE:AN UPDATE 1985-2021*, 2022. 1.

50) 일본 내각부, 「經濟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2025 について」, 2025. 6. 13.,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honebuto/2025/2025_basicpolicies_ja.pdf, 검색일자: 2025. 7. 2.

2. 일본 채무 관련 국제기구 보고서

- IMF 2025년 일본 Article IV 협의 보고서⁵¹⁾에서는 재정전망, 재정위험요인, 재정정책 권고사항, 통화 및 외환 권고사항, 일본 정부 입장 및 계획 등을 다방면으로 제시
- (재정전망) 추가경정예산 확대로 지출은 증가하나 2029년까지 공공채무 비율은 220% 수준으로 감소 후 2030년 이후 다시 상승할 전망
 - 추가경정예산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해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명목 GDP 성장률이 공공채무에 대한 유효이자율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공공채무 비율(GDP 대비)은 2029년까지 감소하여 220% 수준을 유지
 - 2030년 이후에는 기후 대응 및 국방 예산 확대, 고령화와 관련된 지출 압력 및 이자지출비용 증가로 인해 채무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6년까지 10년물 국채금리 2%에 도달하여 2036년까지 이자지출이 4배 증가, 정부 지출의 13%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재정위험 요인) 정치적 요구, 비효율적 지출, 반복된 추가경정예산, 이자·사회보장 지출 증가, 국채수요 불확실성 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위험이 지속됨
 - 소수 여당 체제하에서의 정치적 요구로 인해 적자 확대 요인 존재
 - 탈탄소 정책과 대립되는 에너지 보조금(2024년 기준 GDP 대비 0.6% 수준) 등 비효율적 지출 지속
 -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예산의 투명성, 재정 규율을 훼손하는 추가경정예산의 반복적 사용
 - 이자비용지출 및 사회보장성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중기적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
 - 금리상승과 일본은행의 국채매입 축소로 인해 외국인 및 국내기관 투자자의 국채매입수요의 불확실성 증가

51) IMF, “2025 ARTICLE IV CONSULTATION—PRESS RELEASE,” 2025. 4., <h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25/04/01/Japan-2025-Article-IV-Consultation-Press-Release-Staff-Report-and-Statement-by-the-565846>, 검색일자: 2025. 7. 2.

- (재정정책 권고사항) 단계적 재정긴축과 세입기반 확충, 지출구조 효율화, 국채수요 확대 및 규칙 기반 부채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건전화 필요
 - 2027년까지 매년 GDP 대비 0.2%의 추가 재정을 긴축하고 2028년부터는 재정긴축 규모를 매년 0.5%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2033년 이후에도 채무의 감소세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건전화 노력 필요
 - 세입확대 방안으로는 고소득자 금융소득 과세 강화, 부동산세 과세표준 확대 및 면제 축소, 연금·근로소득 공제 축소 및 배우자 공제 폐지, 소비세율의 통합 및 점진적 인상 등을 제안
 - 비효율적 보조금 제거, 재정승수가 높은 고효율 공공투자에 대한 지출 유지, 보건의료 부문 관련 사회보장지출 효율성 및 타킷 강화 등 지출구조 개선이 필요
 - 국채수요 확대를 위해 변동금리채권 발행, 금리 상승기에도 은행의 시장 리스크 완화를 위한 만기 단축, rule-based fiscal framework 강화 등 부채관리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
- (통화 및 외환 권고사항) 완화적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철회하며, 국채매입은 완만히 축소하되 시장 불안 시 유연 대응하고 외환 개입은 예외적 상황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할 필요
 - 인플레이션 목표 수렴을 위해 기준 시나리오에서의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는 점진적으로 철회되어야 하며, 2027년 4분기까지 중립적 금리 수준(1~2% 추정)에 도달할 때까지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함
 - 일본은행의 완만한 국채매입 축소 유지가 필요하며, 채권시장이 급변하는 등 시장 불안 발생 시 매입 속도 및 만기 구조조정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
 - 외환시장 개입은 환노출에 취약한 경우 시장이 비유동적일 경우 등의 예외적 상황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 (일본 정부 입장 및 계획) 재정여력 제한을 인식하고 재정긴축과 성장 병행, 재정규율 중요성에 동의하며 2026년 기초재정수지 흑자 및 재정건전화 전략 추진 예정
 - 대규모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재정긴축과 동시에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

- 추가경정예산 운용에 있어 재정 규율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 동의
- 2026년에는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 2025를 통해 구체적인 재정 건전화 전략 공개 예정

□ *OECD Economic Surveys: Japan 2024*⁵²⁾에서는 위험요인, 권고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위험요인) 기준 시나리오에서 일본은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로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정부채무가 2060년경 GDP 대비 약 31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불명확한 추가경정예산 운용과 재정건전화 전략 부재로 재정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우려가 존재

- 기준 시나리오(재정정책 변수 고정, 실질 GDP 성장률 약 0.5%)인 경우 2030년 이후 고령화 관련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급속한 노동력 감소로 인해 재정 지출 압력이 심화되면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급격히 확대

- 정부 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2060년경 약 310% 수준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

- OECD 회원국 전반적으로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작고 일반적으로 기술적 조정에 사용되며 새로운 정책을 위한 예산으로는 사용되지 않지만, 일본의 경우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에 대해 불명확한 기준으로 사용되어 재정의 일관성과 투명성 저해

- 예비비를 포함한 일부 미사용 예산이 다른 용도(방위비 증액 재원)로 전용되는 사례 발생

- 현재는 초저금리로 인해 순이자 부담이 GDP 대비 0.47%로 낮은 수준이나 금리 상승 시 채무비용 부담의 증가 가능성 존재

- 일본은 공공 채무를 하향 안정시키고 외부충격에 대한 회복력 증가 및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중기 재정 건전화 전략이 부재로 인해 정부의 채무상환능력에

52) OECD, *OECD Economic Surveys: Japan 2024*, 2024. 1. 11.

대한 신뢰를 저해할 우려

- 향후 5년간 43조엔 규모의 국방비 인상 계획, 아동·가족정책에 연간 3.5조엔 규모 투자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부족
- (권고사항) 일본은 재정규율 강화를 위해 독립 재정기관 설립, 고령화 대응 구조 개혁, 현실적 재정운용 로드맵 마련, 세제 개혁 등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제고가 필요
- 재정규율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장기 재정 지속 가능성 평가, 예산안 및 중기 재정계획 분석, 경제 및 재정 전망 승인 또는 작성 등의 기능을 하는 독립적인 재정기관 설립 필요
 - 일본은 장기 재정 전망 및 재정 목표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는 경제 재정자문회의가 존재하는 반면, OECD 대부분의 회원국에서는 독립적인 재정기관이 존재
 - 독립적인 재정기관 설립 시 추가경정예산 및 예비비가 실제로 위기 대응에 사용되었는지 긴급성과 정당성 평가가 가능하며, 재정준칙 준수, 보다 정확한 재정전망, 경기순응적 성향이 낮은 재정정책 수행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까지 기대
 -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및 연금 수급 연령 상향, 거시경제 지표 연동제의 완전한 적용, 비정규직 대상 고용보험 확대, 본인부담금 등 제도 전반의 지속적 개혁이 필요
 - 근로유인 강화, 노인 빈곤 완화, 세대 간 형평성 개선 등을 위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기대수명에 맞춰 65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60세 정년제를 폐지하는 등 정년 및 연금 수급 연령 개혁 필요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사업장 규모 기준 완화 및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함께 추진
 - 고령화에 따른 의료·요양 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 수, 입원 기간, 의료 이용량 등 구조적 비효율을 개선하고, 행위별 수가제 개편 및 치매 대응 등 지출 효율성 제고 필요

- 고령층의 평균 자산 수준과 근로세대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소득기준 기반으로 본인부담금 비율을 추가 인상하거나 소득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감면 혜택은 전 연령층에 걸쳐 소득이 낮은 가구에 한정하도록 본인부담금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
 - 재정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고성장 가정보다는 낮은 성장률하에서도 기초수지 흑자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조치와 부채비율 안정화 전략이 포함된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운용 로드맵이 필요
 - TFP(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5%(2012~2020년 평균 수준)인 기본시나리오에서는 기초수지가 적자 상태로 유지되는 상황
 - 소비세 인상, 소득세 공제 축소 및 조정, 법인·자본소득세 개혁을 통해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종합적 세제 개혁이 필요
 - 일본 소비세율(10%)은 OECD의 최저 수준으로 장기 GDP와 복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으면서 높은 재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비세를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인상 필요
 - 근로·연금소득공제 축소와 고소득층 대상 공제 개편, 자영업자 소득 투명성 제고, 부양가족공제 재조정 등을 통해 개인소득세의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형평성과 세수 효율성을 높이는 개혁이 필요
 - 법인세의 단순화와 중소기업 우대세율 폐지, 자본이득·배당소득세율 인상을 통해 기업 성장 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고소득자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세제 개혁이 필요
- AMRO Annual Consultation Report Japan-2024⁵³⁾에서는 위험요인에 대해 제시
- (위험요인) 일본은 중동 의존도가 높아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에 취약하며, 반복적 추경과 재정준칙 회피로 재정 규율과 투명성이 약화된 상태
 - 일본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취약하며, 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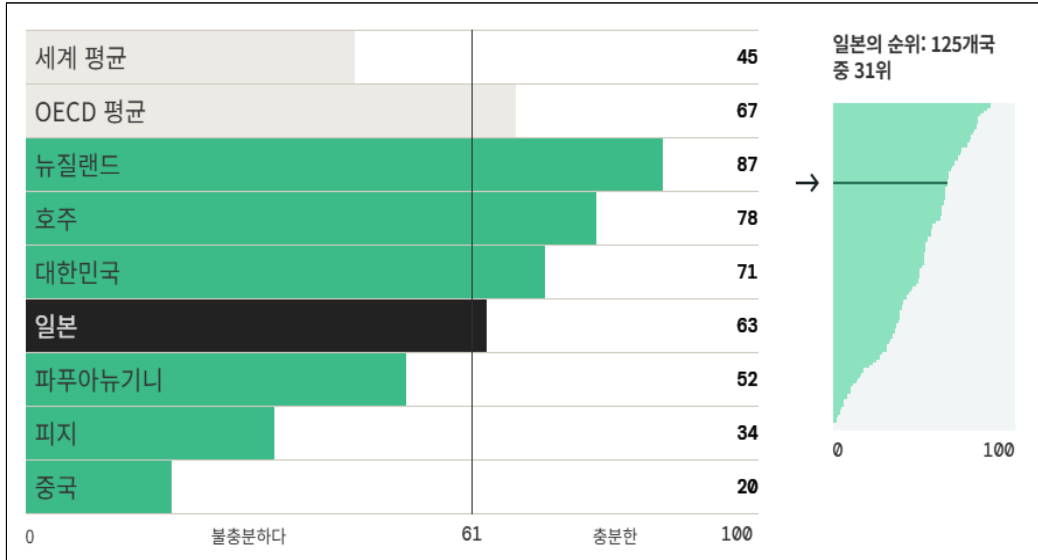
53) AMRO, *AMRO Annual Consultation Report Japan-2024*, 2025. 3.

- 인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크게 초과할 경우 통화정책의 급격한 긴축이 불가피해져 예상치 못한 금리 상승으로 이자부담이 확대되어 재정지출 압박 우려
- 원유의 약 9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의한 에너지 관련 원자재의 가격 급등에 취약한 상황
- 반복적인 추경과 재정준칙 회피로 재정 규율과 중기 계획의 일관성이 약화되었으며, 재정 투명성도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함
- 지속적인 재정적자와 빈번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해 재정 규율을 약화시키고, 연간 예산과 중기 재정계획 간의 일관성 훼손
 - ASEAN+3 국가들⁵⁴⁾의 경우 대부분은 재정적자 한도 규칙(적자 비율 규제)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채무 상한 규칙을 보완하고 운영지침 역할을 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법령에 재정수지 규칙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반복적인 규칙 회피 사례 발생
 - 일본의 재정 투명성(Transparency) 수준은 OECD 회원국 대비 낮은 수준 (63점)⁵⁵⁾

54) ASEAN+3이란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구성하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에 중국, 일본, 한국의 3개국을 추가한 13개국을 의미(출처: 일본은행, 「國際業務」, <https://www.boj.or.jp/about/education/oshiete/intl/g03.htm>, 검색일자: 2025. 7. 10.)

55) 재정 투명성은 중앙정부가 공공 자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지출하는지에 대한 정보에 대해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온라인 공개 여부, 시의성, 포괄성 등을 통해 측정(출처: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 "OPEN BUDGET SURVEY 2023 JAPAN," <https://internationalbudget.org/sites/default/files/country-surveys-pdfs/2023/open-budget-survey-japan-2023-en.pdf>, 검색일자: 2025. 7. 3.)

[그림 V-3] OPEN BUDGET SURVEY 2023의 재정 투명성 국제비교



주: 1. 중앙정부가 공공 자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지출하는지에 대한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8개의 주요 예산 문서의 온라인 공개 여부, 시의성, 포괄성을 109개의 동일한 가중치 지표를 사용해 평가하며, 0점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

출처: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 "Open Budget Survey 2023," <https://internationalbudget.org/open-budget-survey/country-results/2023/japan>, 검색일자: 2025. 7.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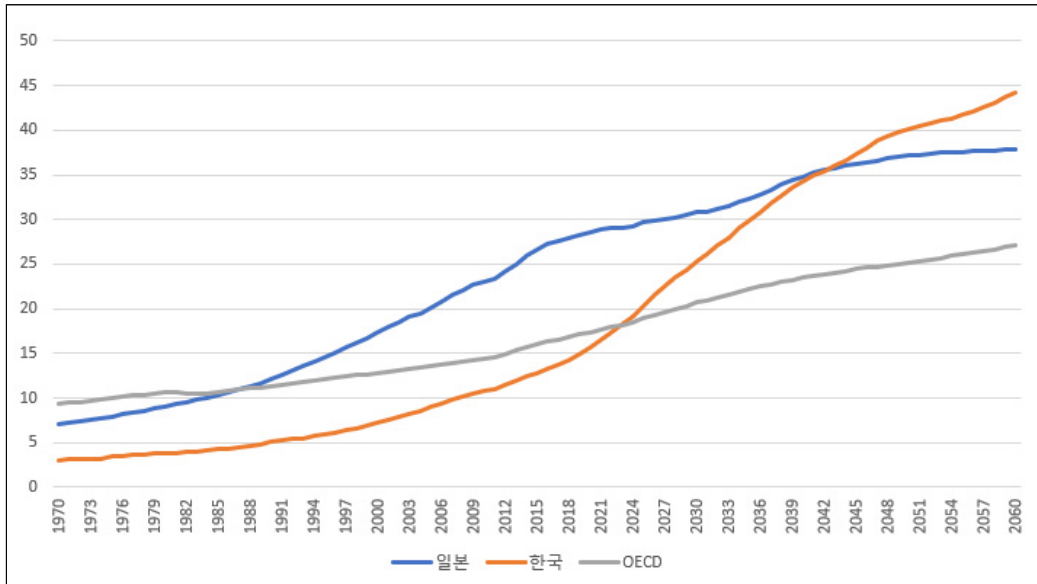
Ⅵ. 한국과 일본의 비교

1. 인구구조

- 한국은 일본보다 36년 늦게 OECD 평균 고령화율에 도달했지만 2042년 이후 일본을 앞서 2060년에는 65세 이상 비율이 44.2%로 일본보다 약 6.3%p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
- 일본의 고령화 비율은 1970년 7% 수준에서 1987년 OECD 회원국 평균(10.9%)에 도달,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 65세 이상 인구는 37.9%로 전체 인구의 1/3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고령화 비율은 1970년 3% 수준에서 200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일본보다 36년 후인 2023년 OECD 회원국 평균(18.2%)에 도달하였으나, 이후 급상승하여 2042년을 기점으로 한국이 일본을 앞서나가면서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일본보다 약 6.3%p 증가한 44.2%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망

[그림 VI-1] 한국·일본 고령화 비율 추이

(단위: %)



주: 1. 2025년부터는 전망치임
 2. 고령화 비율은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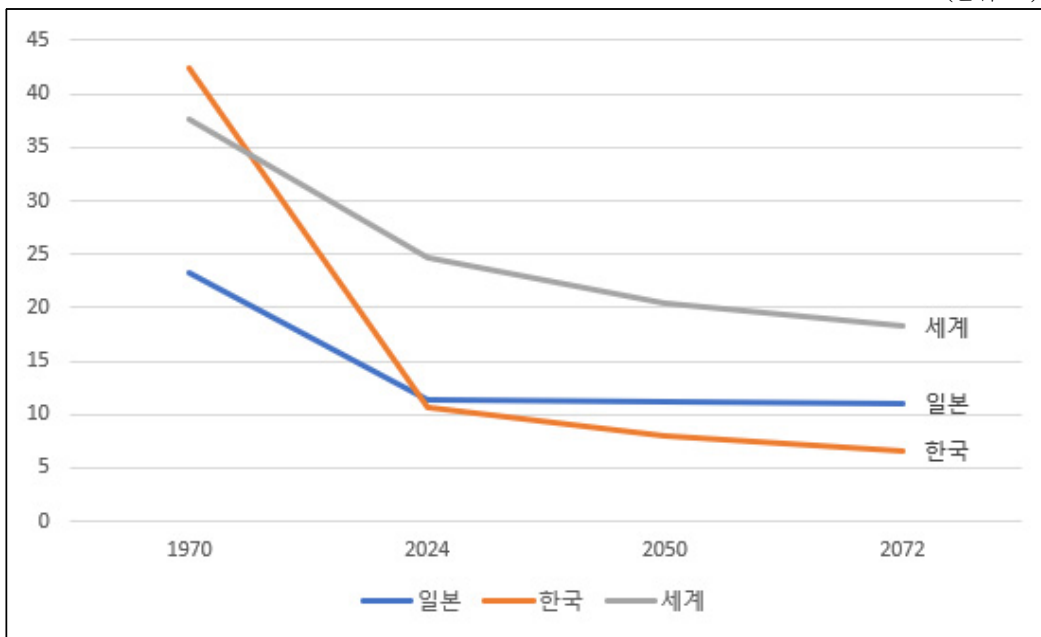
출처: OECD Data Explore, [https://data-explorer.oecd.org/?lc=en&fs\[0\]=Topic%2C1%7CSociety%23SOC%23%7CDemography%23SOC_DEM%23&pg=0&fc=Topic&bp=true&snb=2](https://data-explorer.oecd.org/?lc=en&fs[0]=Topic%2C1%7CSociety%23SOC%23%7CDemography%23SOC_DEM%23&pg=0&fc=Topic&bp=true&snb=2), 검색일자: 2025. 10. 15.; 「日本の財政関係資料」 바탕으로 재작성

- 1970년에서 2072년까지 한국의 유소년인구, 생산연령인구, 노년부양비는 일본과 비교해서 급속도로 악화될 전망이며, 출산율 저하와 학령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연금·복지 재정 악화 등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구문제가 일본보다 선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유소년인구 비율은 1970년 42.5%에서 2072년 6.6%로 급격한 감소세를 전망하였으며, 세계 평균(18.2%)보다 11.6%p 낮아 출산율 저하와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며 일본은 한국보다 완만한 감소세를 보임
 - 일본의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1970년부터 2072년까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2024년 70.2%로 정점에 도달한 후 급속도로 감소세를 보여 2072년에는 일본보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가 더 낮은 수준으로 전망

- 일본의 노년부양비는 2024년 50.7명에서 완만하게 증가하여 2050~2072년에도 70명대 수준이나, 한국은 1970년 5.7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약 20배가 증가하여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
 - 한국의 2060년 노년부양비는 G20 국가 중 제일 높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⁵⁶⁾

[그림 VI-2] 한국·일본 유소년인구(0~14세) 추이

(단위: %)



원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02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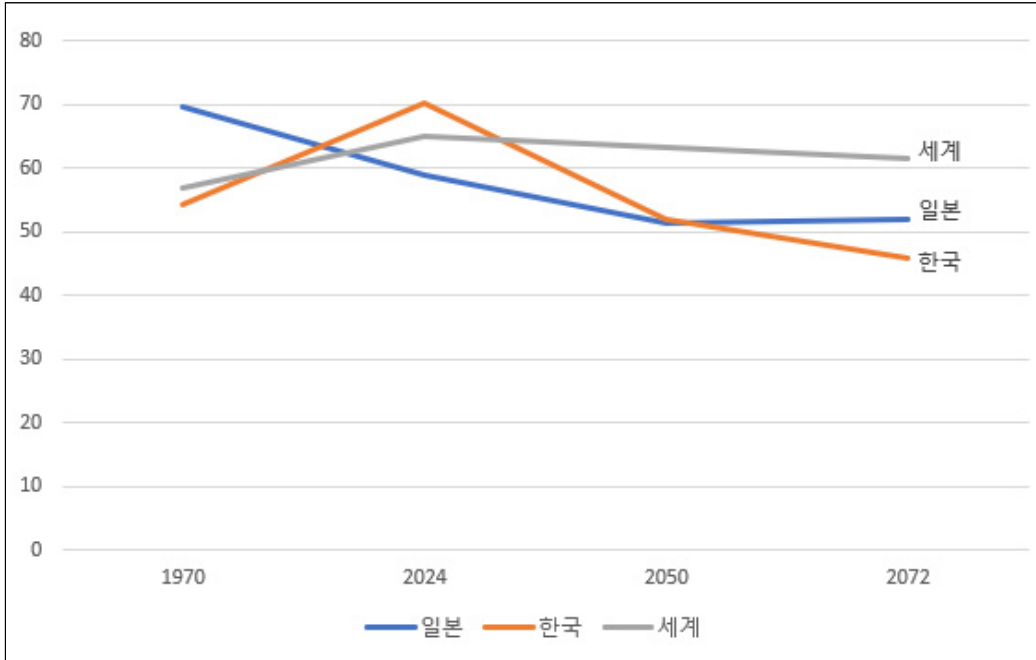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2024. 7.

출처: 통계청,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024. 9., 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7&list_no=432825&act=view&mainXml=Y, 검색일자: 2025. 10. 15. 바탕으로 작성

56) Dorothee Rouzet et al., "FISCAL CHALLENGES AND INCLUSIVE GROWTH IN AGEING SOCIETIES," OECD Economic Policy Paper No. 27, 2019. 9.

[그림 VI-3] 한국·일본 생산연령인구(15~64세)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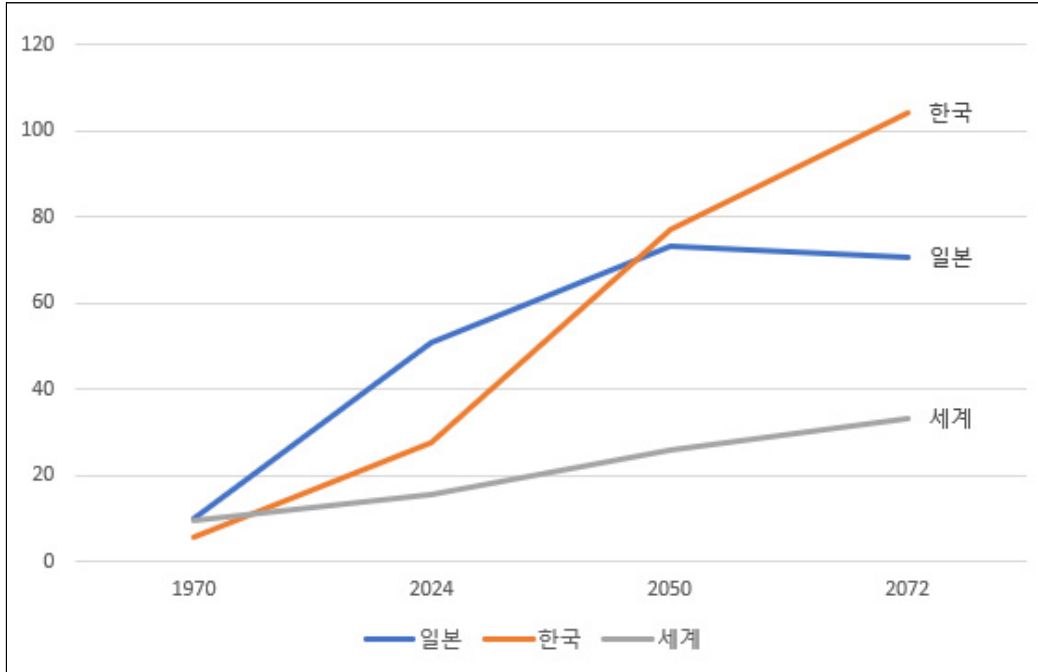
원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023. 12.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2024. 7.

출처: 통계청,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024. 9., 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7&list_no=432825&act=view&mainXml=Y, 검색일자: 2025. 10. 15. 바탕으로 작성

[그림 VI-4] 한국·일본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추이

(단위: 명)



원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023. 12.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2024. 7.

출처: 통계청,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024. 9., 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7&list_no=432825&act=view&mainXml=Y, 검색일자: 2025. 10. 15. 바탕으로 작성

〈표 VI-1〉 인구구조 및 부양비 추이

(단위: %, 명)

구분	국가명	1970	2024	2050	2072
유소년인구(%) (0~14세)	일본	23.3	11.4	11.2	11.0
	한국	42.5	10.6	8.0	6.6
	세계	37.7	24.7	20.4	18.2
생산연령인구(%) (15~64세)	일본	69.7	58.8	51.3	52.1
	한국	54.4	70.2	51.9	45.8
	세계	57.0	65.1	63.3	61.5

〈표 VI-1〉의 계속

(단위: %, 명)

구분	국가명	1970	2024	2050	2072
노년부양비(명) ¹⁾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일본	10.1	50.7	73.1	70.7
	한국	5.7	27.4	77.3	104.2
	세계	9.3	15.7	25.8	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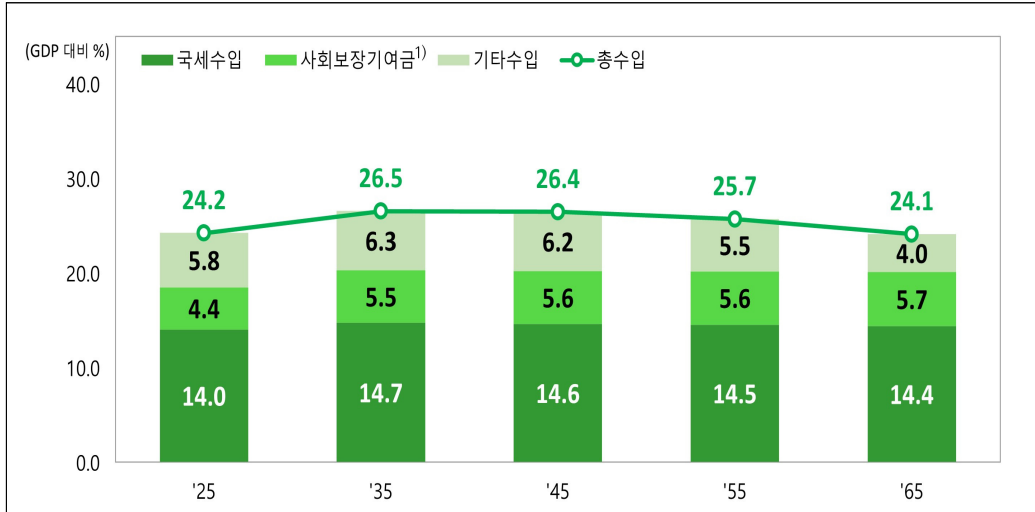
주: 1) 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65세 이상)/생산연령인구(15~64세)]*100을 의미
 원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023. 12.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2024. 7.
 출처: 통계청,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024. 9., 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7&list_no=432825&act=view&mainXml=Y, 검색일자: 2025. 10. 15. 바탕으로 작성

2. 한국의 총수입·총지출·사회보험 재정추계 및 국채이자비용 비중

-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세수입 및 사회보장기여금 증가세 둔화 및 기타수입 감소에 기인하여 총수입이 감소,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의무지출 증가로 총지출은 증가하여 총지출과 총수입의 차이는 2025년 2.3%에서 2065년 10.6%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총수입은 국세수입 및 사회보장기여금 증가세 둔화 등으로 GDP 대비 비중이 2025년 24.2%에서 2023년 26.5%로 증가한 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65년에는 24.1%를 전망
- 총지출은 의무지출이 2025년 13.7%에서 2065년 23.3%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그림 VI-5] 총수입 전망(GDP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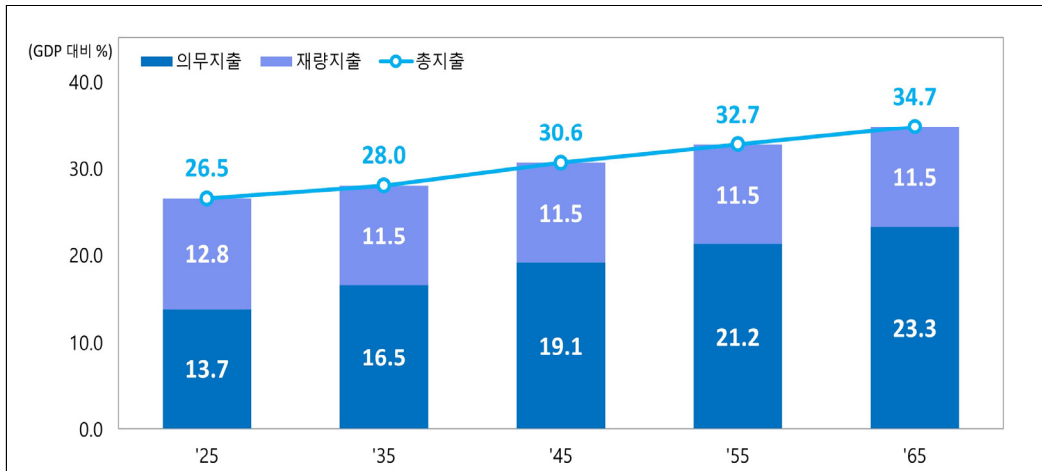
(단위: %)



주: 1)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6개 사회보험을 의미
출처: 대한민국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 표> 발췌

[그림 VI-6] 총지출 전망(GDP 대비)

(단위: %)



출처: 대한민국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 표> 발췌

-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제5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결과」⁵⁷⁾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보험의 GDP 대비 비중은 2024년 8.5%에서 2065년 19.8%로 133% 증가하고, 2065년 전체 사회보장 재정 중 73%(2024년 54.2%)를 차지하여 점진적으로 사회보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 고령화에 따른 자연적 증가와 연금제도 성숙 등 요인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지출이 빠르게 증가

[그림 VI-7] 사회보장재정의 GDP 대비 비중 추이(2024~2065년)

(단위: %)



- 주: 1. 사회보장재정 = 사회보험+일반재정
- 2. 사회보험은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건강·장기요양·산재·고용보험을 의미
- 3. 일반재정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보육정책, 장애인정책, 보훈 등 중앙·지방정부·공기기업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의미

출처: 보건복지부, 「제5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결과」, 2024. 11., p. 10.

57) 보건복지부, 「제5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결과」, 2024. 11.,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107010100&bid=0038&act=view&list_no=1486587&tag=&cg_code=&list_dept=1, 검색일자: 2025. 10. 23.

〈표 VI-2〉 사회보장재정의 GDP 대비 비중 추이(2024~2065년)

(단위: GDP 대비 %, 조원)

구분	2024	2030	2040	2050	2060	2065
사회보장 재정 (총량 규모, 조원)	15.7 (398.6)	7.2 (551.8)	20.5 (896.3)	24.0 (1,349.1)	26.2 (1,836.0)	27.1 (2,105.8)
사회보험	8.5	10.2	13.2	16.6	18.9	19.8
일반재정	7.2	7.1	7.2	7.3	7.3	7.3

출처: 보건복지부, 「제5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결과」, 2024. 11., p. 10.

- 한국의 총지출(결산기준)에서 국채 이자비용(결산기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38%에서 2022년 3.17%로 감소 후 급격히 증가하여 2024년 4.42%를 기록, 2년 만에 2022년 대비 1.4배 증가
 - 국채 이자비용은 2020년 18.6조원에서 2024년 28.2조원으로 4년 만에 약 10조 원 증가
 - 총지출은 2020년 549.9조원에서 2022년 682.4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후, 2024년에는 638조원으로 2022년 대비 소폭 감소

〈표 VI-3〉 국채 이자비용 및 총지출 대비 비중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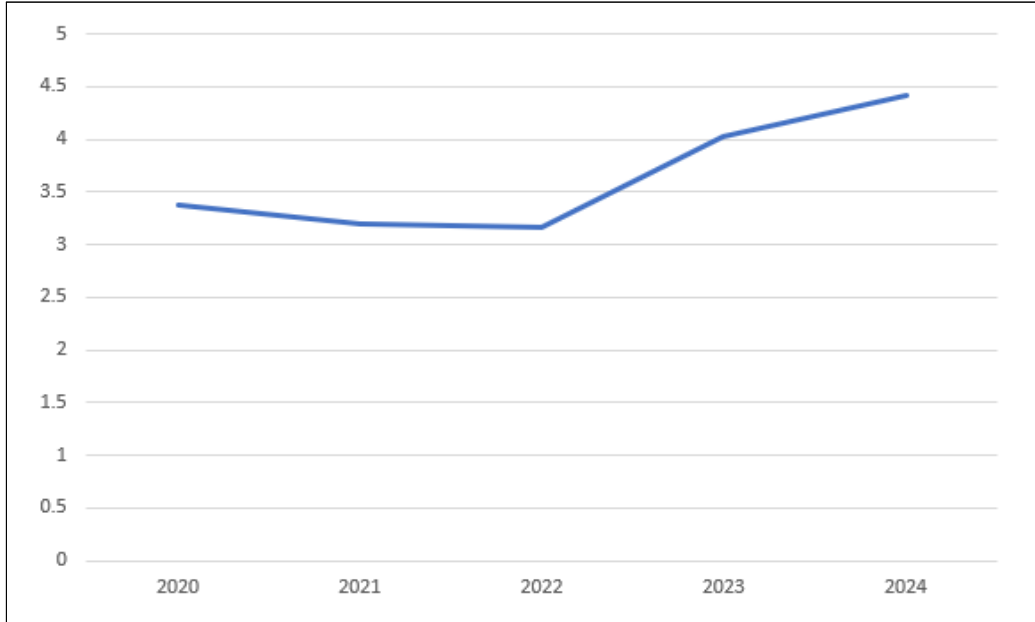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지출(조원)	549.9	601	682.4	610.7	638
국채 이자비용(조원)	18.6	19.2	21.6	24.6	28.2
총지출 대비 국채 이자비용(%)	3.38	3.19	3.17	4.03	4.42

주: 총지출과 국채 이자비용은 결산 기준

출처: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1~2025; 기획재정부, 「정부는 국채 이자비용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도설명자료, 2025. 8. 18.

[그림 VI-8] 총지출 대비 국채 이자비용 추이(2020~2024년)

(단위: %)



주: 총지출과 국채 이자비용은 결산 기준

출처: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1~2025; 기획재정부, 「정부는 국채 이자비용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도설명자료, 2025. 8.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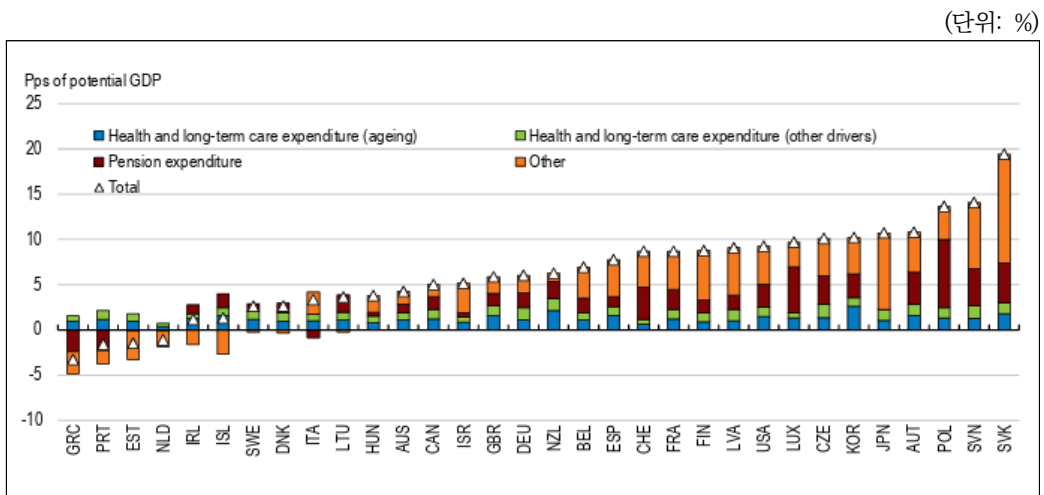
3. 고령화 관련 비용으로 인한 장기적 재정 압박 정도

- OECD 장기모형(OECD Long-Term Model)에 기반한 전망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의 정책적 대응이 없을 경우 평균 OECD 회원국의 재정 압박은 2024~2060년 사이 잠재 GDP의 약 6.25%p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 중 고령화 요인이 전체 증가분의 40% 이상을 차지⁵⁸⁾

58) Vassiliki Koutsogeorgopoulou and Hermes Morgavi, "Ageing populations, their fiscal implications and policy respons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8 44, 2025,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5/10/ageing-populations-their-fiscal-implications-and-policy-responses_be4bd619/6aec03b3-en.pdf, 검색일자: 2025. 10. 25.

- 재정 압박의 수치는 정책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GDP 대비 채무 비율을 현재 수준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삭감 또는 세입 증가 규모 정도를 의미
- 한국과 일본의 경우, 재정 압박 수치(재정조정 노력 규모)가 9%p 초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VI-9] 2060년까지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대응 기초재정수지 균형에 필요한 지출 삭감 또는 세입 증가 규모(GDP 대비)



출처: Vassiliki Koutsogeorgopoulou and Hermes Morgavi, "Ageing populations, their fiscal implications and policy respons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1844,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5/10/ageing-populations-their-fiscal-implications-and-policy-responses_be4bd619/6aec03b3-en.pdf, 검색일자: 2025. 10. 25.

4. 한국의 국채 보유자별 현황과 비교

- 한국의 국채 보유자별 내역에 따르면 국내·외 총 국채잔고액은 2008년 341조 7,000억 원에서 2024년 1,136조 2,000억 원으로 약 794조 5,0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금융취급기관, 해외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 특히 해외 국채잔고액은 2008년 22조 2,000억 원에서 2024년 224조 6,000억 원으로 약 10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음

-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국채 보유는 2008년 3.5%에서 2024년 2.3%로 수년간 큰 변화가 없음
- (금융취급기관) 예금취급기관, 투자펀드, 보험기관, 금융보조기관 등으로 구성된 금융취급기관이 한국의 국채를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55%에서 2020년 65.3%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24년에는 62.2%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
 - 예금취급기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⁵⁹⁾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유동성이 높은 국채 단기물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⁶⁰⁾
 - 보험기관은 IFRS 17(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⁶¹⁾ 시행에 대비하여 만기 30년 이상 초장기물을 중심으로 국고채 투자를 꾸준히 확대⁶²⁾
- (해외) 해외투자자 비중은 2008년 6.5%에서 2024년 19.8%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국채잔고액 또한 2008년 대비 202조원이 증가하여 해외자금의 한국 국채 매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
 - 국채 신용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차익거래유인⁶³⁾이 존재하는 것에 기인하며, 국채 유통시장의 발달로 현금화가 용이하다는 것이 외국인의 국채 투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⁶⁴⁾

59)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은 단기 유동성 규제비율로서 은행이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여 보유한 고유동성자산 규모를 30일간의 유동성스트레스 시나리오하에서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비율

60) 김필규·정화영, 『우리나라 국채 유통시장 현황 및 유동성 분석』, 자본시장연구원, 2023. 12.

61) IFRS 17(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은 국제회계기준으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속성,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대하여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원칙의 정합을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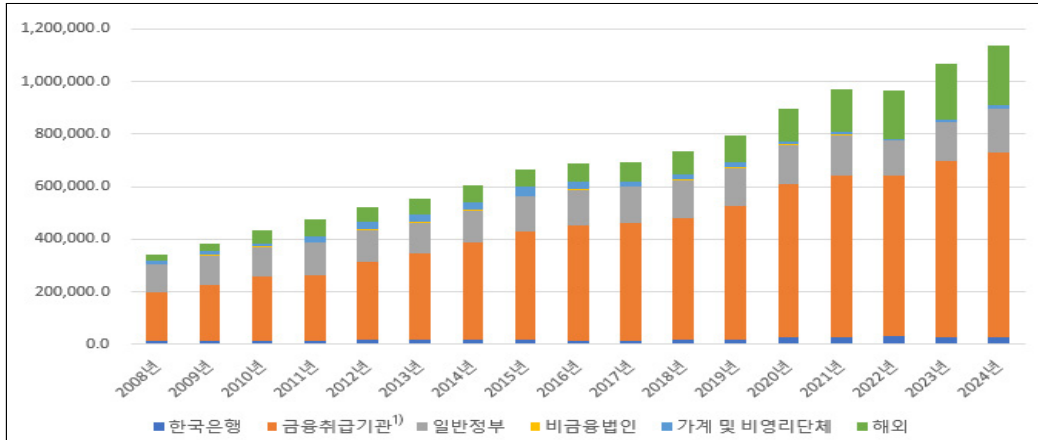
62) 김필규·정화영, 『우리나라 국채 유통시장 현황 및 유동성 분석』, 자본시장연구원, 2023. 12.

63) 차익거래유인은 원화채권 금리-스왑시장을 통한 원화차입비용(=미달러화 금리+스왑레이트)을 의미

64) 김필규·정화영, 『우리나라 국채 유통시장 현황 및 유동성 분석』, 자본시장연구원, 2023. 12.

[그림 VI-10] 한국 국채 보유자별 잔고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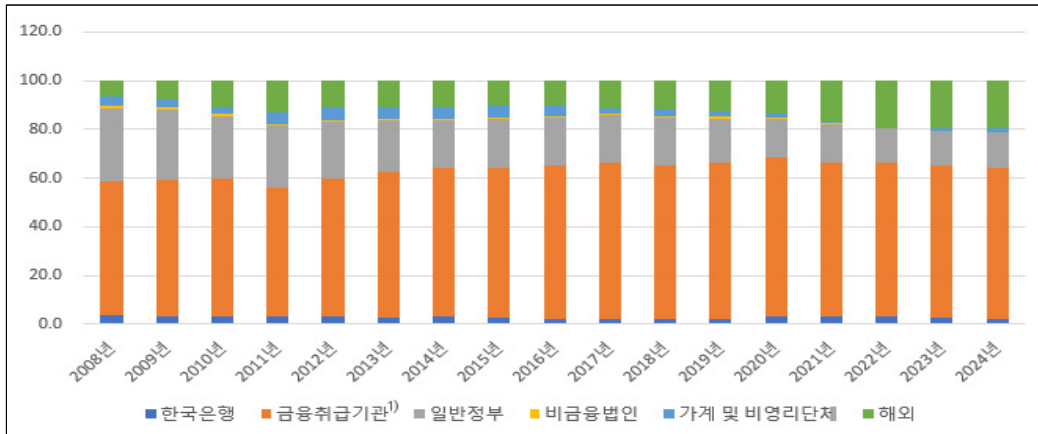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주: 1) 금융취급기관은 예금취급기관, 투자펀드, 보험기관, 금융보조기관 등을 포함
출처: KOSIS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C1%26list_id%3D%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281Y002%26vw_cd%3D%26itm_id%3D%26language%3Dkor%26lang_mode%3Dko%26orgId%3D301%26, 검색일자: 2025. 10. 23. 바탕으로 재작성

[그림 VI-11] 한국 국채 보유자별 구성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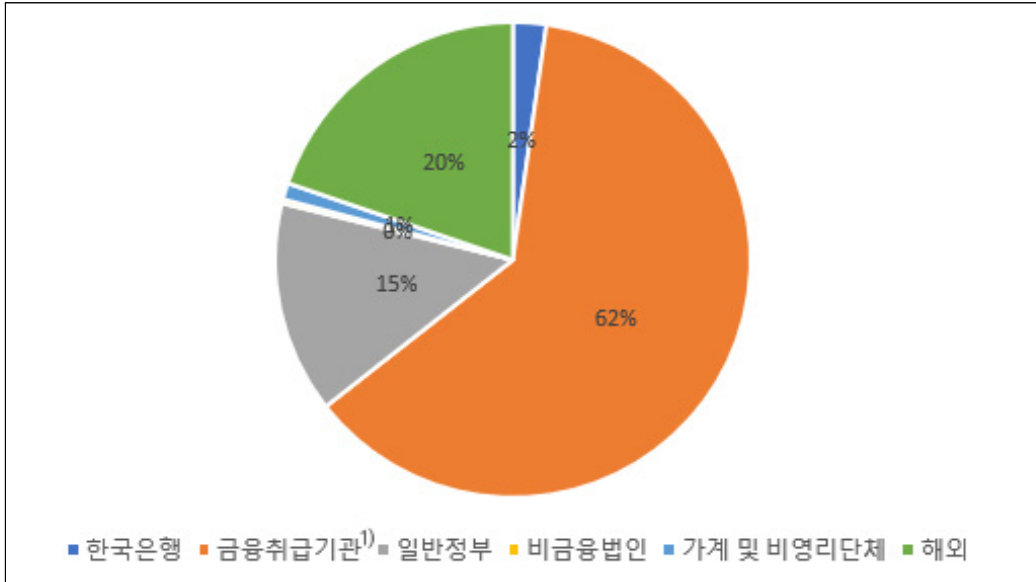
(단위: %)



주: 1) 금융취급기관은 예금취급기관, 투자펀드, 보험기관, 금융보조기관 등을 포함
출처: KOSIS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C1%26list_id%3D%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281Y002%26vw_cd%3D%26itm_id%3D%26language%3Dkor%26lang_mode%3Dko%26orgId%3D301%26, 검색일자: 2025. 10. 23. 바탕으로 재작성

[그림 VI-12] 한국 국채 보유자별 내역(2024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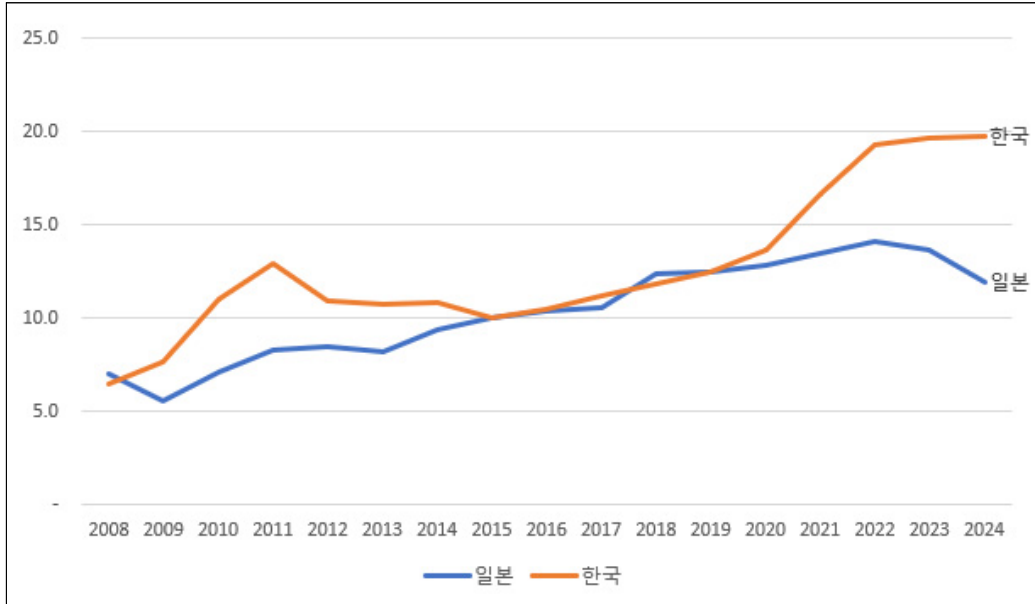


주: 1) 금융취급기관은 예금취급기관, 투자펀드, 보험기관, 금융보조기관 등을 포함
출처: KOSIS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C1%26list_id%3D%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281Y002%26vw_cd%3D%26itm_id%3D%26language%3Dkor%26lang_mode%3Dko%26orgId%3D301%26, 검색일자: 2025. 10. 23. 바탕으로 재작성

- 일본의 해외투자자 비중은 2008년 7.0%에서 2022년 14.1%로 증가하여 정점에 도달한 후 2024년에는 11.9%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한국은 2008년 6.5%에서 2024년 19.8%로 점진적으로 급등하며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해외자본 의존도가 확대되었음
- 특히 2008~2019년과 2020~2024년 동안 해외투자자의 비중이 증가한 규모가 비슷할 정도로 2020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

[그림 VI-13] 한국·일본 국제 해외투자자 보유 비중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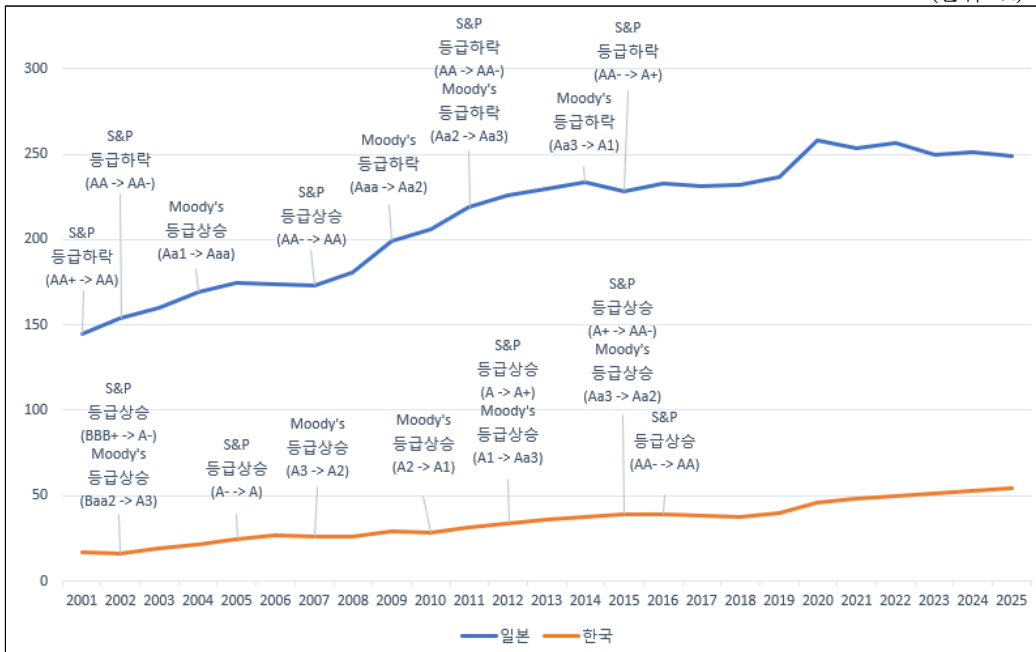
출처: KOSIS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C1%26list_id%3D%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281Y002%26vw_cd%3D%26itm_id%3D%26language%3Dkor%26lang_mode%3Dko%26orgId%3D301%26, 검색일자: 2025. 10. 23.; 일본은행, 「資金循環統計」, 검색일자: 2025. 10. 23. 바탕으로 재작성

5. 일반정부 총채무(GDP 대비)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추이 비교

- 한국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 등급 상향을 통해 2025년 현재 S&P AA 등급, Aa2 등급 수준에 도달한 반면, 일본은 2000년대 초반 한국보다 비교적 높은 등급이었으나 구조 개혁 의제 중단 등 정치적 불확실성, 국가 채무의 급격한 증가,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 가능성 및 채무 억제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 디플레이션 압력 지속 등으로 인해 2025년 현재 S&P A+ 등급, A1 등급 수준으로 한국보다 낮은 등급을 유지

- (S&P) 일본 재정적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재정건전화 조치 없이 2020년 이전 기초재정수지 균형 달성이 어렵고(2011년), 경제 성장 둔화로 재정건전성의 단기간 개선 가능성이 낮음(2015년)
- (Moody's)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누적된 대규모 재정적자와 채무 증가 및 잦은 정권 교체로 인한 재정개혁 추진 어려움(2011년), 재정적자 감축 목표의 달성 가능성과 디플레이션 속 성장촉진 정책의 시기·효과에 대한 불확실성(2014년)

[그림 VI-14] 한국 및 일본 일반정부 총채무(GDP 대비)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추이 (단위: %)



- 출처: 1. 일반정부 총채무(한국, 일본):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4*,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4/october>, 검색일자: 2025. 5. 20. 바탕으로 재작성.
 2. 한국 국가신용등급: 국가데이터처, 「지표누리 e-나라지표 국가신용등급 추이」,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70, 검색일자: 2025. 12. 2.
 3. 일본 국가신용등급: TRADING ECONOMICS, "Japan-Credit Rating," <https://tradingeconomics.com/japan/rating>, 검색일자: 2025. 12. 2.

Ⅷ.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 일본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248.7%(2025년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지출 확대, 반복적인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의 상시화가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함
- 특히 2000년대 이후 장기 저성장과 초저금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채무의 규모는 급증했으나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이자지출 부담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 재무성의 전망에 따르면 금리가 2.5%까지 상승할 경우 2028년 이자지출은 2025년 대비 약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70년 고령화율은 38.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보장비 증가가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일본은 재정준칙의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정치적 요구에 따른 추경 편성이 빈번하여 재정규율이 약화되어 있으며, IMF·OECD·AMRO 등 국제기구 평가에서도 중기 재정전략의 부재와 투명성 부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일본의 채무가 단기간에 위기로 전이되지 않는 이유는 기축통화국 중 하나로 중앙은행(일본은행)이 전체 국채의 약 48%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보유 비율이 낮아 (약 13.5%) 외부 충격에 대한 단기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임

- 하지만 일본은 인구 고령화로 가계 저축률이 감소해 2030년경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경우 이에 따라 정부 채무가 가계 저축을 초과하게 되면 차입비용 상승, 시장 변동성 확대, 금융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⁶⁵⁾

2. 시사점

-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 확대) 고령화로 향후 복지지출 등 의무경직성 지출 비중이 확대되어 일본과 유사한 중장기 재정압박 및 재정건전성 악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구조개혁을 조기에 추진할 필요
 - 일본의 재정문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며, 이는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확대되는 의무경직성 지출 증가에서 재정운용 경직성 심화로 연결
 - 한국은 일본보다 36년 늦게 OECD 평균 고령화율에 도달하였으나, 2042년 이후 일본을 추월하여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4.2%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사회보험 지출은 GDP 대비 2024년 8.5%에서 2065년 19.8%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재정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정년·연금수급 연령 상향, 비정규직 고용보험 확대, 의료·요양 지출 효율화 등 구조개혁의 조기 시행 필요
- (재정준칙의 법제화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 강화) 재정정책의 예측 가능성·신뢰성·지속가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된 재정준칙(fiscal rule)을 도입하고, 예비비 및 추가경정예산의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
 - 일본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재정목표는 실질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IMF,

65) Paolo Hernando, "Japan's Fiscal Crossroads: Navigating High Public Debt and Aging Challenges," AMRO, 2025. 3. 26., <https://amro-asia.org/japans-fiscal-crossroads-navigating-high-public-debt-and-aging-challenges>, 검색일자: 2025. 10. 27.

- OECD 등 외부평가보고서에서 다수 지적
- 한국과 튀르키예를 제외한 OECD 회원국 모두 재정준칙을 도입한 상황
 - (금리 상승기에 대비한 재정 리스크 관리) 향후 금리 상승기에 대비하여 총채무 대비 변동금리 채무의 비율 등 이자율 위험 측정지표 관리,⁶⁶⁾ 국채 만기구조의 장기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
 - 채무 만기를 연장하여 금리 급등에도 이자비용 증가를 최소화⁶⁷⁾
 - OECD 평균 국채 수익률이 2021년 1%에서 2023년 4% 상승하였지만, 이자비용은 2.3%에서 2.9%로 증가
 -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세입 기반 확충)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 확충을 전제로 한 재정정책은 성장률·물가·금리 등 거시 변수 변화에 취약하므로 지속 가능한 복지 재원 구조 확립이 필수적임
 - OECD 등 국제기구보고서에서는 단계적 재정조정, 부가가치세의 점진적 인상, 세제 개편 등 세입 기반 확충 방안을 제안한 바가 있음
 -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서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세원 확보 및 응능부담 원칙에 맞는 세부담 합리화 등 확충 방안을 제시

66) World Bank, *REVISED GUIDELINES FOR PUBLIC DEBT MANAGEMENT*, 2014. 4.

67) OECD, *Global Debt Report 2024 BOND MARKETS IN A HIGH-DEBT ENVIRONMENT*, 2024.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김필규·정화영, 『우리나라 국채 유통시장 현황 및 유동성 분석』, 자본시장연구원, 2023. 12.

대한민국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 9.

박형수·이수연·임현정·장영욱·최영은, 『일본 소비세율 인상의 평가와 전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7.

통계청,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024. 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주요국(일본) 2025회계연도 예산안』, 2025.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년대 일본의 재정건전화 정책」, 재정지출분석센터 내부자료, 2019. 12.

_____, 「국가재정운용계획 총량반-재정지출구조조정 해외사례」, 재정지출분석센터 내부자료, 2024. 4.

_____,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재정운용변화 및 시사점」, 재정지출분석센터 내부자료, 2014. 11.

_____, 「일본 잃어버린 20년 재정·금융정책 사례 및 성과연구」, 재정지출분석센터 내부자료, 2015. 5.

_____, 「최근 주요국의 재정개혁 사례 연구」, 재정지출분석센터 내부자료, 2020. 3.

2. 해외문헌

- 일본 내각부, 『令和7年度の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2025. 1. 24.
- _____, 『経済財政運営と構造改革に関する基本方針2006』, 2006. 7. 7., p. 48.
- _____, 『国民経済計算(GDP統計)』, <https://www.esri.cao.go.jp/jp/sna/menu.html>, 검색일자: 2025. 10. 10.
- 일본 재무성, 『令和7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4. 12. 27.
- _____, 『我が国の財政事情(令和7年度予算政府案)』, 2024. 12. 27.
- _____, 『日本の財政関係資料』, 2025. 4.
- _____, 『債務管理レポート2015』, 2015.
- _____, 『債務管理レポート2020』, 2020.
- _____, 『債務管理レポート2024』, 2024.
- _____, 『債務管理レポート2025』, 2025.
- _____, 『令和7年度予算の後年度歳出・歳入への影響試算』, 2025. 1., <https://www.mof.go.jp/policy/budget/topics/outlook/sy2025a.pdf>, 검색일자: 2025. 5. 25.
- 木内登英, 『政府の財政健全化目標と日銀の国債買入れ減額: 政府・国会は日銀頼みの財政運営からの脱却を, 野村総合研究所』, <https://www.nri.com/jp/media/column/kiuchi/20240619.html>, 검색일자: 2025. 11. 19.
- AMRO, *AMRO Annual Consultation Report Japan-2024*, 2025. 3.
- Dorothee Rouzet, Aida Caldera Sánchez, Théodore Renault & Oliver Roehn, FISCAL CHALLENGES AND INCLUSIVE GROWTH IN AGEING SOCIETIES, OECD Economic Policy Paper No. 27, 2019. 9.
- Ikuo Saito, Chapter 4. Japan's Fiscal Risks, 2015. 3., <https://www.elibrary.imf.org/display/book/9781498324687/ch004.xml>, 검색일자: 2025. 12. 3.

- IMF, *FISCAL RULES AT A GLANCE: AN UPDATE 1985-2021*, 2022. 1.
- OECD, *Global Debt Report 2024 BOND MARKETS IN A HIGH-DEBT ENVIRONMENT*, 2024.
- _____, *OECD Economic Surveys: Japan 2024*, 2024. 1. 11.
- World Bank, *REVISED GUIDELINES FOR PUBLIC DEBT MANAGEMENT*, 2014. 4.
- YiLi Chien, Ashley H. Stewart, What's behind Japan's High Government Debt?,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2025. 4. 1., <https://www.stlouisfed.org/on-the-economy/2025/apr/what-is-behind-japan-high-government-debt>, 검색일자: 2025. 12. 4.

3. 온라인 자료

- 국가데이터처, “지표누리 e-나라지표 국가신용등급 추이”,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70, 검색일자: 2025. 12. 2.
- 보건복지부, 「제5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결과」, 2024. 11.
- KOSIS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C1%26list_id%3D%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281Y002%26vw_cd%3D%26itm_id%3D%26language%3Dkor%26lang_mode%3Dko%26orgId%3D301%26, 검색일자: 2025. 10. 23.
-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OTC foreign exchange turnover in April 2022,” https://www.bis.org/statistics/rpfx22_fx.htm, 검색일자: 2025. 8. 4.
-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Japan's national budget Procedure and the public debt burden,” 2016. 2., 검색일자: 2025. 7. 1.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4,” <https://www.imf.org/en/>

- publications/weo/weo-database/2024/october, 검색일자: 2025. 5. 20.
- _____, “2025 ARTICLE IV CONSULTATION—PRESS RELEASE,” 2025. 4., <h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25/04/01/Japan-2025-Article-IV-Consultation-Press-Release-Staff-Report-and-Statement-by-the-565846>, 검색일자: 2025. 7. 2.
-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 “OPEN BUDGET SURVEY 2023 JAPAN,” <https://internationalbudget.org/sites/default/files/country-surveys-pdfs/2023/open-budget-survey-japan-2023-en.pdf>, 검색일자: 2025. 7. 3.
- Nobuo Iizuka, “Japan’s Tax Revenue Records Historical High for 3rd Consecutive Year,” ECONOMIC INDICATORS FOR JAPAN, 2023.10., 검색일자: 2025. 12. 17.
- OECD Data Explore, [https://data-explorer.oecd.org/?lc=en&fs\[0\]=Topic%2C1%7CSociety%23SOC%23%7CDemography%23SOC_DEM%23&pg=0&fc=Topic&bp=true&snb=2](https://data-explorer.oecd.org/?lc=en&fs[0]=Topic%2C1%7CSociety%23SOC%23%7CDemography%23SOC_DEM%23&pg=0&fc=Topic&bp=true&snb=2), 검색일자: 2025. 10. 15.
- Paolo Hernando, “Japan’s Fiscal Crossroads: Navigating High Public Debt and Ageing Challenges,” AMRO, 2025. 3. 26., 검색일자: 2025. 10. 27.
- R. Glenn Hubbard and Takatoshi Ito, “1 Overview of the Japanese Deficit Question,” https://www.elibrary.imf.org/display/book/9780230007871/ch001.xml?utm_source=chatgpt.com#ch01ref02, 검색일자: 2025. 6. 2.
- Reuters, “Japan’s GDP beats forecasts as consumption, business spending perk up,” <https://www.reuters.com/world/japan/japans-economy-grows-faster-than-expected-q4-strong-capex-2025-02-17/>, 검색일자: 2025. 8. 4.
- TRADING ECONOMICS, “Japan-Credit Rating”, <https://tradingeconomics.com/japan/rating>, 검색일자: 2025. 12. 2.
- Vassiliki Koutsogeorgopoulou and Hermes Morgavi, “Ageing populations, their

- fiscal implications and policy respons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1844, 2025,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5/10/ageing-populations-their-fiscal-implications-and-policy-responses_be4bd619/6aec03b3-en.pdf, 검색일자: 2025. 10. 25.
- 社会実情データ図録サイト, 「経済成長率の推移」, <https://honkawa2.sakura.ne.jp/>, 검색일자: 2025. 10. 10.
- 일본 내각부, 「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2025 について」, 2025. 6. 13.,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honebuto/2025/2025_basicpolicies_ja.pdf, 검색일자: 2025. 7. 2.
- _____, 「経済対策等」, <https://www5.cao.go.jp/keizai1/keizaitaisaku/keizaitaisaku.html>, 검색일자: 2025. 6. 3.
- _____, 「令和6年版高齢社会白書(全体版)」, https://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24/html/zenbun/s1_1_1.html, 검색일자: 2025. 5. 20.
- _____, 「平成13年度 年次経済財政報告」, https://www5.cao.go.jp/j-j/wp/wp-je01/wp-je01-00301.html#sb3_1, 검색일자: 2025. 6. 3.
- _____, 「平成19年度 年次経済財政報告書」, <https://www5.cao.go.jp/j-j/wp/wp-je07/07b00000.html>, 2007.8., 검색일자: 2025. 12. 14.
- _____, 「平成24年度 年次経済財政報告書」, <https://www5.cao.go.jp/j-j/wp/wp-je12/index.html>, 2012.7., 검색일자: 2025. 12. 16.
- _____, 日本経済レポート(2024年度), https://www5.cao.go.jp/keizai3/2024/0212nk/n24_1_1.html, 2025.2., 검색일자: 2025. 10. 19.
- 일본 방위성, “Defense Programs and Budget of Japan,” 2023. 3. 30., https://www.mod.go.jp/en/d_act/d_budget/pdf/230330a.pdf, 검색일자: 2025. 9. 25.
- 일본 수상관저, 「経済財政諮問会議」, https://www.kantei.go.jp/jp/98_abe/actions/20

2004/07keizaishimon.html, 검색일자: 2025. 6. 3.

_____,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第27回)」, https://www.kantei.go.jp/jp/98_abe/actions/202004/07corona.html, 검색일자: 2025. 6. 3.

일본 재무성, 「日本の財政関係資料」, 2025. 4., https://www.mof.go.jp/policy/budget/fiscal_condition/related_data/202504_00.pdf, 검색일자: 2025. 9. 25.

_____, 「財政統計(予算決算等データ)」, <https://www.mof.go.jp/policy/budget/reference/statistics/data.htm>, 검색일자: 2025. 6. 4.

일본 후생노동성, 「平成23年版・労働経済の分析—世代ごとにみた働き方と雇用管理の動向—」, <https://www.mhlw.go.jp/wp/hakusyo/roudou/11/dl/02-1.pdf>, 검색일자: 2025. 10. 22.

일본은행, 「国際業務」, <https://www.boj.or.jp/about/education/oshiete/intl/g03.htm>, 검색일자: 2025. 7. 10.

_____, 「金融市場調節方針の変更および長期国債買入れの減額計画の決定について」, 2024. 7. 31., https://www.boj.or.jp/mopo/mpmdeci/state_2024/k240731a.htm, 검색일자: 2025. 8. 20.

_____, 「金融市場調節方針の変更について」, 2025. 1. 24., https://www.boj.or.jp/mopo/mpmdeci/state_2025/k250124a.htm, 검색일자: 2025. 8. 20.

_____, 「金融政策の枠組みの見直しについて」, 2024. 3. 19., https://www.boj.or.jp/mopo/mpmdeci/state_2024/k240319a.htm, 검색일자: 2025. 8. 20.

재정정책 및 예산분석 연구 25-06
일본 국가채무 현황 및 시사점

인 쇄 2025년 12월 24일
발 행 2025년 12월 31일
저 자 이은경·박창우
발 행 인 이 영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쇄 (주)다원기획 044-865-8115
I S B N 979-11-6655-387-5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5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일본 국가채무 현황 및 시사점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 www.kipf.re.kr



9 791166 553875
ISBN 979-11-6655-387-5